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20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제1회의 독일 통일 20년 평가

독일 통일의 과정
Jörg Bentmann (독일연방내무부 신연방정부 담당국장)

독일 통일의 법적 근거와 통일의 의미
Siegfried Broß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제1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제2회의 한반도 통일비전

독일 통일의 성과
Ralph Michael Wrobel (독일 츠비카우시 베스트작센대학교 교수)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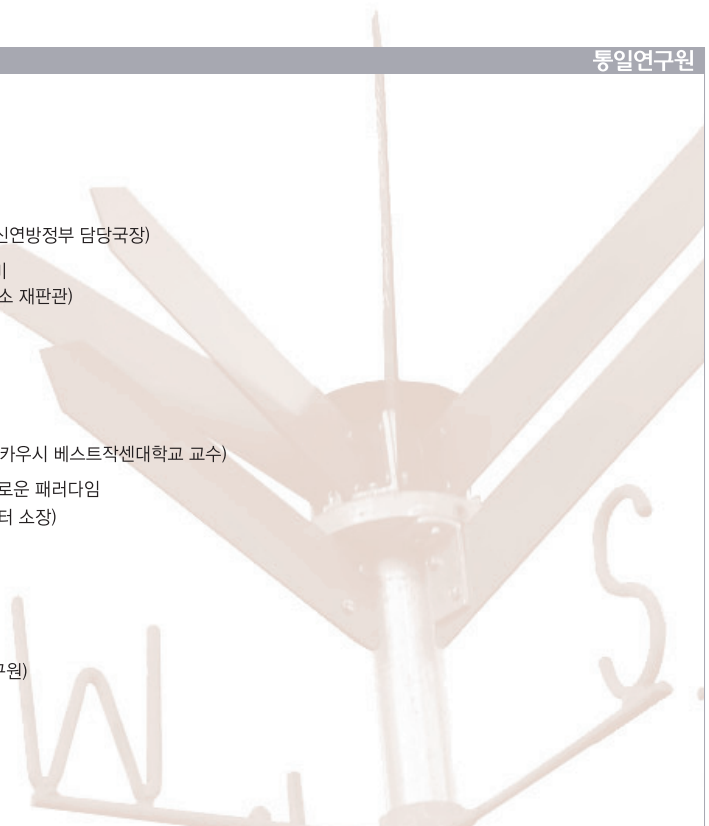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제3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관점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Scott Snyder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중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Zhu Feng (베이징대학교 교수)

제3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통일연구원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늘품플러스 (T. 070-7090-1177)

인 쇄 처 (주)예원기획 (T. 02-745-8090)

ISBN 978-89-8479-561-7 93340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 회 식
개 회 사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축 사 권영세 국회정보위원장
환 영 사 Bernhard Johannes Seliger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
기조연설 Hans-Ulrich Seidt 독일 대사

제 1 회의 독일 통일 20년 평가

사회 :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 10:30~12:30 발 표 1 독일 통일의 과정
Jörg Bentmann
독일연방내무부 신연방정부 담당국장
발 표 2 독일 통일의 법적 근거와 통일의 의미
Siegfried Broß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토 론 정용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여인곤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김학성 충남대학교 교수
12:30~14:00 오 찬

제 2회의 한반도 통일비전

사회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14:00~15:50 **발 표 1** 독일 통일의 성과
Ralph Michael Wrobel
독일 츠비카우시 베스트작센대학교 교수
- 발 표 2**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 토 론**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영중 중앙일보 차장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 15:50~16:10 휴 식

제 3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관점

사회 :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 16:10~17:50 **발 표 1**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Scott Snyder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 발 표 2** 중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Zhu Feng 베이징대학교 교수
- 토 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홍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국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09:30 ~ 10:00 **Registration**

10:00 ~ 10:30 **Opening Ceremony**

Opening Address

Jae Jean Suh(President, KINU)

Congratulatory Address

Young Se Kwon(Chairman of Intelligence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Welcoming Address

Bernhard Johannes Seliger

(Resident Representative, Hanns-Seidel Stiftung)

Keynote Address

Hans-Ulrich Seidt(Ambassad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the ROK)

Session I | **Evaluation of the 20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Chair : Sang Man Lee(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10:30 ~ 12:30 **Presentation I**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Jörg Bentmann (Head of Division, New Federal States,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Presentation II The Legal Basis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Significance

Siegfried Broß (Judg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iscussion Yong-Kil Chung (Honorary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In-Kon Yeo

(Director, Information Center for Unification Studies, KINU)

Hak-Sung Kim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2:30 ~ 14:00 **Lunch**

Session II **The Vision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ir : Sung-Wook Nam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14:00 ~ 15:50 **Presentation I** Benefits of German Unification: A
Review after 20 Years

Ralph Michael Wrobel

(Professor, West Sax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of Zwickau)

Presentation II The Changing Unification Environment
and a New Paradigm for Discourse on Unification

Jinwook Choi

(Director, Center for Inter-Korean Cooperation Studies, KINU)

Discussion Dae Seok Choi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Young-Jong Lee (Political Writer, JoongAng Ilbo)

Seong-Joon Ko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Seong Ho Jh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15:50 ~ 16:10 **Coffee Break**

Session III	Perspectives of Neighboring Countries Regarding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

Chair : Yong Ho Kim (Professor, Inha University)

16:10 ~ 17:50 **Presentation I**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 U.S. Perspective

Scott Snyder (Senior Associate, The Asia Foundation)

Presentation II Unification of Two Koreas: On View of China

Zhu Feng (Professor, Peking University)

Discussion Sang Hyun Lee

(Director, Security Studies Program, The Sejong Institute)

Heungkyu Kim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ok-Shin Kim

(Director,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KINU)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오늘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한스 울리히 자이트(Hans-Ulrich Seidt) 독일 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학술회의 발표를 위해 멀리 독일에서 와주신 벤트만(Jörg Bentmann) 국장님, 브로스(Siegfried Broß) 재판관님, 브로벨(Ralph Michael Wrobel)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국제학술회의의 후원을 맡아주신 중앙일보사와 공동주최로 참여한 한스자이텔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이상만 교수님,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님, 김용호 인하대 교수님,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학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10월 3일은 독일이 통일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 통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있던 독일인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누리게 해준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뤘고 독일의 국가적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비용만 많이 들고 사회적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룬 후 어찌 사회적인 고통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독일인들은 통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노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반도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김씨 왕조를 마주하며 북핵 위협과 남북의 분단 속에 여전히 놓여있습니다.

며칠 전 당대표자대회를 개최한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과 더욱 강경한 엘리트 친위세력을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시켰습니다. 또한 6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미·북 평화회담의 선행을 요구하며 항구적인



핵무기보유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발전의 시간을 거스르고 있는 북한을 21세기 세계질서로 유도해내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남북관계의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분단이후 2세대가 지나고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반도의 국제정치지형은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통일을 혼란과 비용부담으로 회피해야할 대상이 아닌, 다음 세대의 희망과 우리민족의 응비를 알리는 기회로 보자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민족에게는 결단코 희망찬 미래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통일이 온다고 해도 통일의 기쁨을 누리는 당사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국제학술회의는 독일 통일경험과 성과 속에서 시사점을 찾아 내일의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21세기는 우리에게 ‘분구필합’(分求必合: 분단이 길어지면 반드시 통일이 된다는 옛말)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 있는 토론들이 통일준비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의 통일에 대한 소망이 고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오늘 왕림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술회의 개최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통일연구원 원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한국과 독일의 의원친선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축사하게 되었고, 이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스 자이트(Hans-Ulrich Seidt) 대사님으로부터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학술회의를 만들어 주신 한스자이텔재단의 켈리거(Bernhard Johannes Seliger) 소장님과 통일연구원의 서재진 원장님의 수고에 정말 감사드리며, 멀리 중국과 미국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 오신 브로스(Siegfried Broß) 박사님께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브로스 박사님께서 본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데 대해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처음 맺어질 당시, 이 조약의 문제점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정당들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지만 당시 독일기독교사회당연합(CSU)의 당수였던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의 리더십에 의해 기본조약의 합헌성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의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약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이에 관한 중요한 해석 지침들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10가지 지침은 그 이후 독일 내에서의 통일 논의가 정치적, 이념적 과열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아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브로스 박사님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0년대 초에 이어서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다시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독일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념을 달리하는 체제 간의 대립으로 분단 상태에 있다가 통일된 국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 예멘,



베트남 3개 국가입니다. 이 중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 통일을 하였고, 예멘은 우리가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합의방식으로 통일하는 듯했다가 결국에는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에 의해 해결이 됐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낸 예는 독일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 사례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과 우리의 분단과정과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를 보면 1949년도에 동독과 서독 2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69년에 이르기까지 다소 보수적인 기민-기사당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냉전 분위기에 따라 동독과 서독은 대결전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약 13년 동안 빌리브란트(Willy Brandt)가 이끄는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과거의 대결적인 방식으로는 분단을 극복하기 어렵고 분단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고에 입각하여 소위 ‘신(新)동방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1982년 이후 다시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1990년에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에 이르기까지 보수적인 정부와 북한은 극심한 대결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년 동안 다소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빌리브란트의 신(新)동방정책을 원용한 소위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2008년 이후에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보수여론으로 회기 할 수도, 좌 편향된 방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다소 이중적인 상황에서 다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찾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임무

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1982년 이후에 독일의 기민-기사당 정부가 어떻게 동서독 관계를 관리하여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지 벤치마킹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원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국회 정보위원장,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 권영세



환영사

존경하는 서재진 원장님, 권영세 의원님 그리고 독일에서 멀리까지 방문해 주신 브로스(Siegfried Broß) 재판관님, 벤트만(Jörg Bentmann) 국장님, 브로벨(Ralph Michael Wrobel) 교수님, 자이트(Hans-Ulrich Seidt) 대사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한스자이텔재단과 통일연구원의 공동 국제학술회의의 환영사를 올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저께 10월 3일은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독일 통일은 평화와 자유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점에서 저희 독일 국민들에게는 매우 기쁜 날입니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많았고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기쁜 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을 보면 더욱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구 동독지역을 보면, 예전에 헬무트 콜(Helmut Josef Michael Kohl) 수상이 말씀했던 ‘변영하는 경관’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하고 공신력 있는 이포(Ifo) 경제연구소 드레스덴(Dresden) 지구장을 지내고 계시는 라그니츠(Joachim Ragnitz) 박사님은 독일 통일과 동독의 변천에 관한 전문가이신데, 이분의 최근 보고서는 이러한 성공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구 동독지역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북한의 경제상을 볼 때 남북한 간의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년을 맞은 독일 통일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기쁜 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도 발표자가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접국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지원자였음을 기억할 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인접국가와의 협력관계는 평화로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우 뜻 깊고 건설적이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유익한 결론에 도달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렇게 역동적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파트너인 통일연구원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중요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이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통일연구원 스태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한스자이텔재단 한국사무소장 Bernhard Johannes Seliger



기조연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일연구원과 한스자이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연설하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짧은 영상물에서 보셨듯이 독일은 통일 20년이 지나면서 매우 역동적인 번영을 누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뤼셀을 봐야 합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브뤼셀에 체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체류 기간 동안 한-EU FTA 협정에 서명할 것입니다.

한-EU FTA 협정으로 인해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가 사는 시장, 27개 회원국이 속한 거대한 시장에 한국이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의 통일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이 없었다면 현재 27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EU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EU가 없었다면 16개국이 사용하는 유로화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상영해 드린 영상물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나왔는데 이곳은 유럽 중앙은행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제중심지답게 한국의 상사 내지 은행들이 집중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27개국으로의 EU의 확대, 유로화 도입, 유럽의회의 활동 등 이러한 것들은 독일 통일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발전은 혼란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발전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세계 경제혼란과 관련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시작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의 경제혼란과 관련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2007년에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리먼 브라더스의 도산이 2008년 9월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그리스가 국가파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됐는데 통일된 독일과, 아직도 통합을 이루지 못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현재 미국의 예산적자, 무역적자, 실업률은 독일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내의 다른 국가들을 독일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통일독일은 유럽의 안정을 이끄는 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독일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성장률입니다. 현재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방정부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공고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공고화, 국제 금융시장 및 재정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연합과 함께 그리고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커다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독일연방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주에 한-EU FTA협정 서명이 완료되면 독일은 한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20년 전에 독일이 이루었던 것처럼 한국도 평화와 자유의 통일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독일 대사 Hans-Ulrich Seidt

목 차

개 회 사
축 사
환 영 사
기조연설

제 1회의 독일 통일 20년 평가

- 독일 통일의 과정3
Jörg Bentmann (독일연방내무부 신연방정부 담당국장)
- 독일 통일의 법적 근거와 통일의 의미25
Siegfried Broß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 제1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31

제 2회의 한반도 통일비전

- 독일 통일의 성과41
Ralph Michael Wrobel (독일 츠비카우시 베스트작센대학교 교수)
-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61
Jinwook Choi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81

제3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관점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95
Scott Snyder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중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105
Zhu Feng (베이징대학교 교수)	
제3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11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7

제1회의: 독일 통일 20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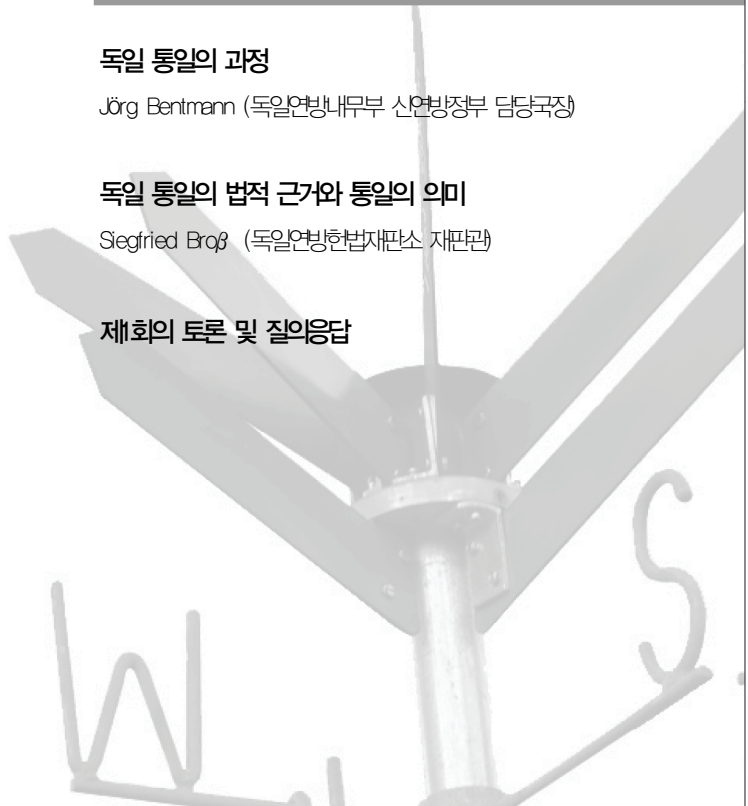
독일 통일의 과정

Jörg Bentmann (독일연방내무부 신안방정부 담당국장)

독일 통일의 법적 근거와 통일의 의미

Siegfried Broß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제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독일 통일의 과정

Jörg Bentmann (독일연방내무부 신연방정부 담당국장)



I. 서론

평화적 혁명을 통해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 체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 1989~90년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특히 그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공산주의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쇠퇴한 것이 몰락의 원인으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공산주의를 부흥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개혁정책이 사실상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동독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서독)으로 대규모 이주사태(1989년 9월 11일부터 헝가리를 경유하거나 같은 해 11월 9일 양국 간 국경이 개방된 후에는 동독에서 직접 서독으로 이동)가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면서 집권 사회주의 통일당이 무너졌다. 이는 분단 독일의 필요성을 종식시켰다. 동독이 존재하는 이유는 서독에 대한 공산주의적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 통일당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1년 국경이 폐쇄된 이후에도 양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서로 연락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신이나 소포 등 우편물 왕래뿐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방문도 가능했다(연금 수급자만이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동독 시민들은 서독 TV와 라디오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었고,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이 아닌 서독 국민들과 비교했다. 동독 인구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집단이 항상 서독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분단기간이 두 세대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양국 국민들은 여전히 서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통일당 입장에서 불편한 이 같은 상황은 동독이 서독의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소비에트 연방이 특히 석유를 비롯한 값싼 원자재를 공급해 주면서 위성

국가에 대한 지원 여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동독이 서독에 빌린 부채 규모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동독은 서독의 자금이 필요했고, 서독은 자금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동독 국민들의 통행 자유화 확대를 요구했다. 이는 서로 공감하는 독일 정체성 의식과 동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심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이 1989~90년 가을과 겨울에 무너지자 서독의 대규모 원조 외에는 이 위기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가 없었다. 통일 말고 다른 해결책을 바라던 해외 정치인들조차 적당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II. 1989-90년 회고

1. 국내전개

- 11월 9일
- 정상 회담
- 지방선거
- 통화·경제·사회통합과 통일조약

1989년 동독의 위기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정치개혁이었다. 고르바초프는 ‘개방’(Glasnost)과 ‘개혁’(Perestroika)이라는 슬로건과 새로운 외교정책을 통해 공산주의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신봉했고 생산력을 개방하여 러시아 제국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를 원했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개혁’정책 때문에 공산주의가 붕괴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집권 여당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발상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국가들은 거부했다. 동독의 집권 여당인 사회주의 통일당은 이 새로운 외교정책노선은 반겼

지만 그 외 국내 정책개혁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자국 내 불만이 고조되었다. 과거부터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동독 주민의 수가 국내상황의 확실한 지표 역할을 해왔는데, 그 수치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국경과 맞닿은 자국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국경을 완전히 개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국경이 무장해제 될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그 해 여름이 지나면서 헝가리는 서독으로 가고자 하는 동독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1989년 9월 11일 헝가리는 망명한 동독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했고, 9월 말경에는 3만여 명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동독에서 서독으로 건너 갔다. 10월 초 동독은 프라하와 바르샤바에 있는 대사관에서 망명을 신청한 동독인들에게 망명을 허락했다.

이와 동시에 동독 내 시위가 늘어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민운동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대개 교회의 비호를 받으며 군사적 세뇌와 서독에 대한 악의적인 고정관념 주입을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초기의 시민운동은 조직적이지 못하고 뚜렷한 세부 계획 없이 분산된 상태였다. 하지만 1989년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시민운동은 공공시위의 핵이자 동력이 되었다. 또한 공산당으로 흡수되지 않았던 마지막 사회기관인 교회는 체계적인 시위가 일어난 최초의 장소가 되었다. 반대 운동은 이를 십분 활용했다. 비록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힌 것은 사실이지만, 혁명이 유혈사태 없이 비폭력으로 진행되고 평화기도, 촛불시위, 폭력방지 집회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시민운동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덕분이었다. 또한 비폭력 혁명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훗날의 성공 비결 혹은 적어도 소비에트 연방의 개입이 없었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시위를 유발한 중요한 기폭제는 1989년 5월 7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부정투표였다. 시민운동주의자들이 투표소에서 표를 집계했고 평소대로 집권당에서 부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1989~90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면,

세 가지 결정적인 단계를 찾을 수 있다. 각 단계는 다음 사태를 촉진시켰다. 첫 번째는 1989년 10월 초이다. 9월말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기도는 시위로 이어졌고 군중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분수령이 된 시점은 10월 9일로, 당국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안당국은 그렇게 많은 군중이 집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시위군중은 7만 명에 달했지만 안전요원의 수는 8,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국도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이 사임한 후에 시위는 산불처럼 확산되었다.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고 토론의 장이 전역에서 형성되었다. 사회주의 통일당은 지도부를 교체하며 시민운동을 진압하려 노력했지만 급속도로 진행되던 당의 몰락을 멈추게 하거나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작 7주가 지난 12월 3일 크렌츠 휘하의 사회주의 통일당 새 지도부의 시대는 끝이 났다.

한편, 두 번째는 11월 9일에 발생했다. 분열과 뭔가 해야 한다는 욕심이 결합해 사회주의 통일당 새 지도부는 서독으로의 이주와 해외 여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고 이를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서독의 언론은 이를 베를린 장벽의 개방으로 해석했고 베를린 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가 당국에 개방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은 1953년과는 달리 소비에트 연방이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을 대신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위 표어였던 “우리는 한 민족!”이 서서히 “독일, 통일 조국”으로 바뀌었다.

11월 7일과 8일 본에서 동독 정부는 서독 정부에게 100억 마르크라는 대규모 자금의 즉각적인 지원과 1991년부터 매년 20억씩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서독 정부는 사회주의 통일당이 전력 공급 독점권을 포기하고 민주주의 정당과 자유 선거를 허용한다면 기꺼이 지원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가두 시위자들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요청이었다. 동독 지도부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11월 28일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텐-포인트 프로그램(Ten-Point Program)을 발표했다. 이것이 당시 적절하고 결정적인 단계였다. 프로그램은 목표가 여전히 모호하고 조직적이지 못한 동독의 대규모 운동에 명확하고 뚜렷한 형식을 심어 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독일 통일이 국제적 사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서독의 유럽 우방 국가들은 노골적인 반대는 아니었지만 신중한 태도로 대응했다. 하지만 콜 총리의 프로그램은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든든한 아군 두 팀을 가졌다. 한쪽은 동독 국민이었다. 콜 총리가 12월 19일 드레스덴을 방문했을 때 군중들은 그를 환영했다. 다른 쪽은 미국으로, 미국의 지지는 국제협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당시 아버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독일이 서방의 동맹국으로 남고 최종적으로 국경을 인정하는 한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결권에 대한 독일의 의지를 지원했다.

세 번째 가속화 단계는 1989년 12월 말에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통일당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스 모드로우가 일종의 ‘독일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시도했으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했다. 모드로우가 군중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꿔가며 국가공안국(슈타지)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센트랄 라운드 테이블 소속 시민 운동가들은 슈타지를 해체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은 무너졌다. 동독이 정상적인 정부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동독 인민의회(Volkskammer)가 1990년 3월 18일로 앞당겨져야 했다. 독일 사회주의 연합당이 예상치 못했던 성공을 거두면서 기본법 제 23조에 의거해 집권 여당이 되어 통일로 가는 가장 신속하고 간단한 방도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민주 선거로 선출된 두 독일 정부는 1990년 4월 통화·경제·사회통합 및 독일 통일조약에 관한 협상을 실시하고, 연합 4개국과 독일 통일의 국제적 측면을 논의했다. 이 세 가지 협정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중 통화·경제·사회 연합에 대한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동독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서독으로 밀려드는 동독인들의 물결을 멈출 수 있었다. 안전성과 가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통화 중 하나인 독일 마르크화(DM)를 투입함으로써 서독은 동독의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보였다. 다른 대안은 없었다. 동독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했다. “독일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로 갈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통일로 가는 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1990년 3월 18일 통과되어 그해 7월 1일부로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불과 2달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1990년 8월 31일 체결된 독일 통일조약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따금씩 논란이 되고 있다)되는 것을 관장했다. 양측의 대표단 간뿐 아니라 각 대표단 내에서도 종종 야기되었던 특정 항목에 대한 복잡한 문제와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플러스 4 조약(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체결, 1991년 3월 15일 시행)은 독일 통일의 외교정책을 다루고 있다. 통일된 독일은 국내외 문제에 대한 완전한 자주권을 획득하고 외부 국경을 최종 국경으로 인정하며, 유럽과 세계 보안체제에 통합되었다.

1990년 8월 23일 동독 인민의회는 80%의 찬성표를 얻어 동독의 서독 흡수를 승인했다. 흡수는 10월 3일 이루어졌다.

2. 국외전개

- 열강 4개국 상태
- NATO/바르샤바 조약
- 2 + 4 회담/조약

서독과 동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이자 양국 모두 보다 큰

경제 및 국방 시스템에 완전히 속해 있었다. 서독은 NATO 회원국이었고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에 속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독일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강 4개국(미국, 소비에트 연방, 영국, 프랑스)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은 계속해서 양 독일에 적용되었다. 4개 연합국은 2차 대전의 종식(1945년 6월 5일 베를린 선언)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 여러 조약들은 후에 독일 양국의 점령법으로 대체되었지만 연합국의 특별 권한은 분명하게 보호되었다. 통일과정에서 국경문제, 연합 가입, 군사력 등 통일 후 독일의 외교정책에 대한 ‘2+4 회담’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1990년 2월 이 같은 회담 개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회담은 5월 5일 본(Bonn), 6월 22일 동베를린, 7월 17일 파리(폴란드 참석),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스크바에서의 협상 결과는 끝나는 순간까지 확실하지 않았다. 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1990년 9월 12일 체결되면서 독일 통일의 문이 열렸으며, 최종 비준 장치가 남아있던 1991년 3월 15일 공식 행사와 함께 시행되었다. 조약은 동독, 서독, 프랑스, 영국, 미국,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조인되었다.

10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약은 다음과 같이 통일 독일의 외교 및 보안 정책을 다룬다.

- (1) 통일 독일의 영토는 서독과 동독, 베를린 전 지역을 포함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포기한다.
- (2) 통일 독일은 평화를 신봉하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단념할 것을 재확인한다. 군사 인력은 최대 37만 명으로 제한한다.
- (3) 서독에 주둔한 소련군은 1994년 말까지 서독 영토에서 철수한다.
- (4) 독일 어느 지역에도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주둔시키거나 배치할 수 없다.

- (5) 베를린과 전체 독일에 대한 열강 4개국의 권한과 책임은 말소된다.
- (6) 통일 독일은 국가 주권을 모두 얻게 될 것이다.
- (7) 동독의 토지개혁은 추가 문서에 명문화된다.

그 결과 분단 독일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독일은 국내외 사안에 대하여 완전한 자주권을 획득하였다.

Ⅲ. 경제상황

- 동독 지원
- 통화·경제·사회통합
- 동구권 수출시장의 붕괴
- 신탁관리청

동독 경제는 40년간의 공산주의 체제로 인해 심각한 상태였다. 1980년대 말 대부분의 동독 공장은 거의 폐허 수준으로 기계는 완전히 구형이거나 몹시 낡았다. 건물과 교통 인프라, 통신 부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제조 생산력은 서독의 25~30% 수준에 불과했다. 많은 제품들은 동독 내부나 공산권경제 상호원조협의회 소속 국가에서만 팔릴 수 있었고, 시장경제의 제품과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었다.

1980년대에는 중앙계획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물품부족현상이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군사 예산 부담과 더불어 거대해진 행정 및 정당, 보안 장치의 부담을 안고 있던 소비에트 연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재를 더 이상 주변 의존국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결국 동독에 대한 저가 석유 공급량을 줄였다. 그러나 동독은 막대한 부채와 해외 통화 소득을 위한 석유 제품 수출에 의존도가 큰 상태였다. 따라서 부채는 늘어갔고 필요한 투자와 현대화에 필요한 자

금은 점점 부족해졌다. 1989년 10월 중앙계획경제를 담당했던 게어하르트 쉬러가 신임 총리 크렌츠에게 경제 상황을 보고 하면서, 쉬러는 동독이 파산 직전의 상태이며 동독이 서독에 빚진 부채를 줄이지 않고 현재의 부채를 유지하기만 해도 생활수준이 25% 하락하여 동독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최초의 상황이었고 서독 주민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경악하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다. 이는 국경 봉쇄가 동독 정부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일단 베를린 장벽이 열리자 엄청난 인파가 국경을 넘나들었을 뿐 아니라 서독으로 밀려들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제약도 없었다. 1989년 말 30만 명이 동독을 떠났고, 1990년 초에는 이동 인구가 매일 2,000명에 달했다. 인민의회 자유선거가 끝나고 그 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주 5,000여 명이 서독으로 떠났다.

대규모 이주는 국제사회에 모드로우(Modrow)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동독 지도부조차 확신을 불러일으키거나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독은 더 이상 가망이 없었다. 관건은 분단 독일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것이었고, 이는 무엇보다 서독의 역할에 달려있었다.

서독의 관점에서 해결책은 동독인들에게 동독에서의 미래를 제시해야만 했다. 동독인들의 대규모 이동 행렬이 멈추지 않는다면 동독의 인구는 줄어들고 새로 유입된 이주민을 통합할 수 있는 서독의 수용 능력에도 과부하가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통화·경제·사회통합을 제시한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는 동독의 열악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심어주었고 대규모 이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전성과 가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통화 중 하나인 독일 마르크화(Mark)를 도입함으로써 서독은 동독의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보였다. 또한 사회적

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통일로 향한 물러설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990년 2월 6일 서독 내각은 통화·경제·사회 통합을 제안했다. 사전 회담의 과정을 거친 뒤, 인민의회 자유선거가 끝난 후에 민주적 선거방식으로 선출된 동독정부와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서독과 동독의 통화·경제·사회통합은 1990년 5월 18일 양국의 재무부 장관인 테오도르 바이겔(Theodor Waigel)과 발터 롬베르그(Walter Romberg)가 협약을 체결하고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통화 통합을 위한 환율은 침예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환율이 공개되면서 분데스뱅크의 '2:1 안'은 동독 내 시위를 유발했으나 최종 환율은 타협을 통해 나왔다. 임금, 급여, 납입금의 환율은 1:1, 현금과 은행 예금은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 2,000 / 4,000 / 6,000 동독 마르크까지는 1:1, 이보다 높은 금액은 2:1,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3:1 환율을 적용했다.

임금/급여 환율을 동독 근로자의 수입이 서독 국민 평균치의 1/5 또는 1/6 미만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서독으로의 대량 이주를 막을 수 있었지만, 공장에는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장은 임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서독 마르크화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야 했다. 수출 소득에 대한 동독의 비공개 환율(4.4:1)을 고려하면, 이는 340% 증가에 달하는 수준이었다.¹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었다면 전환의 부작용을 줄이는 대신 그 기간이 장기화 되었을 공산이 크다.

독일 마르크화의 도입은 동독 경제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으나 다른 대안은 없었다. 지체하거나 다른 형태를 선택하거나 다른 환율을 적용했다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실행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2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마르크화가 도입된 당시 서독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반면 동독

1_ Nach Gerhard A. Ritter, *Wir sind das Volk! Wir sind ein Volk!* (Geschichte der deutschen Einigung, München, 2009), P. 90

소비자들은 통화 통합으로 생긴 새로운 구매력을 서독 제품을 사는데 쓰고 싶어했기 때문에 동독 제품에 대한 수요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신탁관리에 있는 동독 제조업체들은 구매자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국내 시장은 거의 불모지 상태였다. 독일 마르크화의 도입은 동유럽 시장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그 이유는 이제 구매자들은 전환이 가능한 통화로 수출품을 사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있는 동유럽 국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해외 무역이 붕괴되었다. 동독 제조업체의 낮은 생산성 역시 수출 경쟁에서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했다.

사회 통합을 통해 서독의 복지관련 법규정이 동독에도 적용되었다. 즉, 연금, 보건, 사고, 실업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져 구성된 서독의 보험 체계가 동독의 통합 사회보험을 대체했다. 통화·경제·사회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연금 수급자로 연금 혜택이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45년간 근무하면 기본급의 약 37%) 순식간에 평균 순수입의 70%로 늘어났다. 동독은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연금 수급자 가계의 소득이 서독 가정의 경우보다 높았다.

1990년 3월 1일 모드로우 정부는 신탁관리청(Treuhandsanstalt)이라는 정부자산의 신탁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을 설립했다. 이 기관의 설립 취지는 준 사회주의 방침에 따라 국가의 산업 정책을 개편하는 것이었으나, 1990년 3월 인민회의 선거 이후에는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공기업의 민영화가 주업무가 되었다.

1990년 여름, 신탁관리청은 민영화되지 않은 모든 공기업을 담당했다. 총 8,500만 기업으로 대략 4,500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400만 명에 이르렀다. 이후 관리하는 대상은 12,354개로 늘어났다. 과거 국가공안국에서 관리하던 2,400만 헥타르(Hectar)에 달하는 농작지 및 산림, 과거 동독 군대 소유 자산의 상당 부분, 다수의 국영 아파트, 국영 제약회사의 자산 역시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했다. 각자 별도의 경제 체제를 보유한 정당과 대형 조직의 광범위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독립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실제 관리 업무는 10월 3일 신탁관리청으로 위임되었고, 이후 이 위원회는 자산의 법적 인수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 이는 서독의 민주주의 정당 체제에 참여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신탁관리청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동독 경제의 신속한 민영화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신탁관리청이 불가피한 구조적 변화는 미루면서 지나치게 구조조정만 강조한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쪽에서는 구조조정에 힘쓰지 않고 경제적으로 희생가능한 기업과 일자리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1994년 12월 31일 신탁관리청이 해체되기 전까지 전체 12,354개 기업 중에서 6,546개가 민영화 되었고(53%), 재민영화된 업체가 1,588개(13%),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된 기업이 310개(2.5%), 청산된 기업이 3,818개(30%)였다. 재무 측면에서 신탁관리청은 적자를 기록했다. 1990년 10월 동독 산업의 민영화는 대략적으로 6,000억 서독 마르크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민영화된 기업이 처음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거나 대대적인 재단장을 거친 후에야 거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0억 마르크 손실을 기록했다. 1995년 1월 1일 신탁관리청의 부채는 구 부채청산기금에 추가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신탁관리청이 동독 경제를 ‘파산’시켰고 핵심 산업의 몰락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은 근거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서술한 상황에서 보듯이 동독 경제는 자유시장과 경쟁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파산 상태였다. 신탁관리청은 이러한 ‘유산’에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는 두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경제적 문제가 신탁관리청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IV. 1990년 이후의 조치

- 독일 통일기금
- 독일 교통단일화 사업
- 재산소유권 문제
- 연대협약 I, II
- 연금 및 사회보험제도

독일 통일기금은 동독 지방정부에게 기초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1990년 특별연방기금 형태로 발족되었다. 이 기금은 통일 이후 옛 동독의 새로운 5개 주에 대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으로 1994년까지 이들 주에 대해 옛 서독 지역의 주 정부 간 세입 분배를 대체하였다. 기금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총 1,150억 독일 마르크로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1991년부터 기금 납부액이 매년 줄어들었다. 금액은 몇 차례 증가해 1993년 3월 총 1,600억 마르크에 이르렀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기금의 총 822억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기금의 40%는 옛 동독지역의 지방정부에 지원되었다. 독일 통일기금은 대부분 신용(채권) 시장에서 충당되었으며 극히 일부분이 연방보조금에서 나왔는데, 구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정부가 이자를 지불했다.

통일조약에 따라 독일 통일기금은 옛 동독지역 주들이 독일의 주 정부 간 세입 분배에 포함되는 1994년 말에 해체되었다. 부채는 주 정부 간 균등하게 배분되었고 지방정부는 자기 몫의 20%를 해당 주에 상환했다. 1993년 이래로 지방정부는 옛 서독지역의 주들이 지닌 부채의 약 40%를 떠맡았다. 2004년 말 독일 분데스뱅크의 집계에 의하면 부채는 386억 유로에 달했다. 공동 채무자로서 연방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기금의 책임을 맡았고 이후에는 연방예산에 연방채무로 통합되었다.

독일 교통단일화 사업의 핵심은 단일 국가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390억 유로에 육박하는 이 투자 프로그램은 9개 철도 사업, 7개 고속도로 사업과 1개 수로 사업을 포함한다. 1991년부터 2008년 말까지 해당 사업에 거의 286억 유로가 투자되었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도 사업 131억 유로
- 도로 사업 141억 유로
- 수로 사업 14억 유로

철도 사업 중 6개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말까지 도로 구역이 추가 개통되고 사용 중인 신규 도로의 거리는 총 1,820km가 넘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토지와 물적 자산을 포함한 재산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조약의 시행과 함께 동독이 제정하고 조약에 포함된 투자우선법(InVorG) 역시 발효되었다. 이 법규는 1990년 6월 15일 미해결 재산 사안의 해결을 위한 공동 선언의 많은 부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 점령법이나 주권(1945~1949년)에 의거해 몰수한 대상은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
- (2) 신탁 관리와 물적 자산, 상업 기업 및 다른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유사한 조치는 유예될 것이다.
- (3) 위 (1)과 (2)의 사항을 고려하여 몰수된 물적 재산은 이전 소유자나 그의 상속자에게 돌려줄 것이다.

재산 반환 요청이 쇄도하면서 동독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할 중요한 투자에 걸림돌이 될 조짐이 바로 보이자, 1992년 추가 투자우선법에서 문제의 물적 재산이나 건물이 특히 이윤기업 설립과 같은 긴급한 투자 용도로 필요한 경우나, 고용 창출 및 보장하는 등 투자 목적이 경제적 지원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미해결 재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주보다 하위 단계의 행정단위인 베를린 도시-주에 설립되었고, 각 주에도 이를 전담하기 위한 미해결재산관리국이 설치되었다. 이 법이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미해결재산연방관리청이 개설되었다.

2009년 말 청구인의 재무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청건의 99% 이상이 해결되었다. 55만 건 이상의 보상 및 정정 지불법에 따라 491,000건이 완결되었다(89%). 2009년 말 1945년 이후 몰수 건에 대한 보상금액은 13.7억 유로에 달했다.

V. 연대협약 I, II

독일에서 옛 동독지역 주에 연방보조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세수 분배의 일환으로 체결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협약이다. 이 연대협약을 통해 구 동독지역의 주들이 독일 분단으로 야기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1993년 3월 13일 연방정부는 각 주의 주지사와 다음과 같이 연대협약 I 을 체결했다.

-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기금을 1,607억 마르크로 늘리고 1995년부터는 이 기금을 통한 지불을 중단한다.
- 옛 동독지역 주를 주 세수 분배 장치에 포함시킨다.
- 각 주의 부담을 부가세 형식으로 37%에서 44%로 늘린다.
- 주 세수 분배 장치가 주의 세수를 국가 평균 세수의 99.5%로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연방보조 지원금을 도입한다.
- 동독지역의 5개 주와 베를린에 매년 206억 마르크씩 10년 동안 연방 이전 비용을 제공한다.
- 무역세 사정액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분배를 줄여서 지

방정부에서 서독지역 주 재무 부채의 40%를 부담하도록 한다.

- 신탁관리청의 부채와 부채처리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구 부채 일부를 청산하기 위해 구 부채청산기금을 신설했다. 초기 부채는 3,360억 마르크로 연방정부 혼자서 이자를 지불했다.
- 연대협약 I 은 1995년에서 2004년까지 시행되었다.

채 몇 년이 지나기 전에 연대협약 I 로는 2004년까지 동독지역 주들의 경제수준을 서독과 비견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연대협약 II 에 대한 협상이 이어지고 결국 2001년에 채택되었다.

연대협약 II 는 2005년에서 2019년 말까지 총 1,560억 유로를 다룬다. 첫 번째는 연방 보조지원금을 동독지역 주에게 특별 목적을 위해 직접 지불한다(1,050억 유로), 두 번째는 동독지역 주(베를린 포함)에게 쓸 수 있는 연방 예산에서 510억 유로를 만든다. 이는 중요한 분담금으로 동독지역 주들이 점차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2020년 이후로는 조국 분단으로 인한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준다.

필자가 간략하게 다룬 본 카탈로그에서 동독과 서독의 독일 국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우선 옛 서독 지역의 주와 도시, 지방자치단체 및 개개인이 재정적 지원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동독 시민들이 이루어낸 성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독인들은 불과 1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체제와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개인의 인생 및 즉각적인 환경에 일어난 것처럼 격동적인 변화를 외부인이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아침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규칙과 기준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사항은 거행된 모든 조치가 연방공화국처럼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알맞은 국민, 의회, 사법기관의 감독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필자는 역사와 전반적인 통일과정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이루어낸 결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다.

VI. 전망

- 경제
- 인구통계학적 변화

시장경제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망이 중요하다. 하지만 독일의 산업과 특히 인력은 EU뿐 아니라 독일의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현대적이고 생산성이 뛰어난 시장 경제체제로 인상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 통일 이후 독일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민영화와 신생 기업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을 양산해냈다. 서비스 산업은 자리를 잡았고 전환 과정에서 거의 무너질뻔했던 제조업 부문도 성장 동력으로 발전했다.

통일 후 처음 몇 년간 독일의 상황은 뒤쳐졌던 옛 동독지역이 급격히 성장하며 상당부분 만회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독의 인당 GDP는 1991년 서독의 42.9%에서 1996년 68.3%로 상승했다(33.5%에서 62.2%로 증가한 베를린을 제외한 수치이다). 동독지역의 생산성은 1990년 서독의 30%를 밑도는 수준에서 현재 79%까지 증가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동독 경제가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었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1990~91년 GDP가 40% 하락했고 취업 인력은 1/3이 줄어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충격 요법이긴 했지만 피할 수 없었

다. 가장 심한 충격은 사회적 이전으로 그 강도가 약화되었다. 중요한 전제조건은 신탁관리청이 실시한 기업 민영화였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 초 제조부문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9년 구 동독지역의 산업적 부가가치는 실질적으로 1991년 수준보다 2배로 증가했다. 총 부가가치에 대한 산업의 비중은 2000년 14.5%에서 2008년 17.4%로 늘어났다.

혁신과 투자,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목표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연방 정책은 오늘날 옛 동독지역을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과 연구기관이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특히 환경과 에너지 기술은 구 동독지역 주에서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태양열산업은 이제 작센 주의 프라이베르그, 작센-안할트의 비터펠트-볼펜, 브란덴부르크의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지역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상태이다. 옛 동독지역에 있는 석탄연소 공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 기술을 자랑한다. 1990년대 화학산업의 본고장인 할레-라이프치히-비터펠트는 최신 환경기술의 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옛 동독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다른 주 정부나 연방정부에게 이전 지불금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독일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추세는 구 동독지역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회뿐 아니라 특별한 과제를 부여한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지역마다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다. 구 동독지역의 농촌이나 변두리 지역의 경우 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현재 옛 동독지역의 일부 지역은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인구의 절반이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를린, 포츠담,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같은 도시의 인구는 여전히 안정적이거나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마저 있다.

2008년 독일의 인구는 약 8,200만 명으로 그 중 1,650만 명(20.1%)이

옛 동독지역에 거주한다. 옛 서독지역의 인구는 2006년까지 늘어난 반면, 동독지역의 인구는 1990년 1,810만 명에서 약 9.5%가 감소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와 출산보다 사망건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을 하락, 나이든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구 동독지역에서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1990년에서 2008년까지 구 동독지역의 노동인구(20~65세)는 1,120만 명에서 1,030명으로 감소했다. 구 서독지역의 경우 대체로 3,94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동시에 노동인구의 평균연령도 높아졌다. 45~65세의 인구는 1990년 이래로 41.1%에서 46.6%로 증가했다. 따라서 노동인구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 현재 인구 감소와 노령화 추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적응하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효과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숙련된 노동력이다. 또한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능적인 사회보험체계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시스템이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옛 동독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산업, 사회적 동반자, 사회, 정부 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화 역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구 동독지역의 노동시장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노동인구의 감소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노동 가능 인구가 예상대로 계속 줄어든다면 노인, 여성, 기술이 없는 젊은이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시켜 과거에는 미처 활용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사회가 나이든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얻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게 모두 다양한 기회를 선사할 수 있다. 우리는 나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데 방해가 되는 부담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가능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방정부 역시 이러한 시도를 감독하는 내무부와 함께 방법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옛 동독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공공 및 민간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만한 사업 기틀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싶다. 독일 전체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관한 연방정부 전략이 2012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독일 통일의 법적 근거와 통일의 의미

Siegfried Broß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I. 토대

헌법상의 출발점

- 전문(前文)
- 146조

II. 헌법 아래 법률상의 출발점

1990년 8월 31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에 독일 통일의 전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통일협약 체결했다.

통일협약 및 1990년 9월 18일자 합의에 관한 법률, 이에 관한 1990년 9월 23일의 찬성법률(통일협약 영어판 CD 3부 전달)인데, 구조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즉,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및 그에 따른 변화가 없거나, 혹은 통일협약을 통해 약간 수정한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을 독일민주공화국에 적용했는데, 기본적인 수용문제, 예를 들면 서로 상이한 법제도의 통합뿐만 아니라 상이한 법문화의 통합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독일민주공화국의 현실 및 새로운 법제도에 상응하는 사회체제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두 개의 분단국가를 통합하는 계획을 위해 규범적인 근거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줬다. 첫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것은, 독일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던 것과 같은 한 분단국가로부터 다른 분단국으로의 이주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총체적인 경제 및 사회구조가 생겨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적인 요소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으며, 통일 이전부터 효과적인 전개과정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예전 독일민주공화국에 존속했던 것과 같은 사업장 형태나 보육시설 또는 병원 등과 같이 상대방 분단국 지역에 상존하고 있던 기존의 구조들을 검토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적 구조는 어느 한쪽 국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양측 분단국 국민들이 새롭게 통일되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제도 및 국가형태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통일과정에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 필요하다.

현재 존속하는 세계적인 국제법상 또는 국제계약법상의 구속력을 가진 의무사항들(UN, 세계은행, IMF, WTO 등)에 근거하여, 인권 및 기본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유엔 인권선언, 사회헌장 등에 포함되어 있고, 법문화 및 경제, 사회형태를 규정하는 법적 기준을 시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입하는 측 주민들의 정체성과 수용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 분단국 통일의 법률적 토대와 관련하여 시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독일 통일은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이 국가와 관련된 법률상으로 분단된 이후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유럽의 기준에 따라 보통 30년으로 잡는 한 세대에 대략 비견되는 시간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0년 현재 분단의 세월이 약 60년에 달하며, 이는 두 세대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 시간들을 감안해야만 한다. 즉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Ⅲ. 독일 통일의 의미

이전에 하나였던 국가가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통일에 관해 평가할 때 경제적, 재정적 요소를 주요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성과와 관련된 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준들만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후에 내부적으로 강력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1990년 이전에 동서독 양 진영으로 분단된 채 체제유지를 위한 경쟁에 허비되던 막대한 힘과 노력을 그 이후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위상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늘어난 인구수와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도약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수 세기 동안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한 경험과 과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국가와 인간 또는 가족으로 얽힌 관계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개인적인 경험의 지평들이, 분단을 통해서도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체제는 유지되었지만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허비되었다.

1990년에 있었던 동서독의 통일 이후에 통일 독일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과 같은 국제적인 요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 즉 통일된 국가 내에서의 정체성 문제와 사람들 간의 수용의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1회의 토론 및 질의 응답



정 용 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독일 통일과 우리의 차이점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국내문제, 남북한 관계, 그리고 주변국 관계 등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독일 통일 당시 상황은 민주화과정 혹은 평화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상황이었다. 특히 동독 인민선거에서 서독 집권당이 지원한 동독의 독일연합이 승리하게 되어, 동독에서도 기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서독의 콜 총리와 동독의 드 메지에르 총리 모두 기민당인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남북한 상황에 적용해보면, 가령 북한에서 총선을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게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20년 8월 23일이 매우 중요한데 동독 인민의회가 동독의 통일을 결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즉, 헌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편입되는 방안을 가결했던 것이며, 찬성 294표, 반대 62표, 기권 7표로 안건이 가결되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 인민대표자대회를 통해 남한으로 편입하지는 결정이 나올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도 표결로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독은 당시 상당한 경제대국이었고 동독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다. 남북한은 국제적 영향력이 그리 크지 못하나, 독일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싶다. 서독은 경제 대국이며, 동독주민들이 선호할만한 민주복지국가였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이 서독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즉,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의 지리적 여건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통일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지녔다.

벤트만 국장께 질문 드리고 싶다.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의 관계는 매우 원만했으며 동독의 62개 도시와 서독의 62개 도시가 각각 교류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남북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통일 접근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어서 브로스 재판관께 질문하겠다.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28일 콜 수상이 연방제를 발전시켜 국가연합으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브로스 재판관께서 말씀하신 단계적 통합방식과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국가연합을 달성하려면 어떠한 법률적 준비가 필요한가? 독일 통일은 조약과 협약에 의한 통일인데, 우리는 어떤 법률부터 정비해야 될지 궁금하다.

여 인 곤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개인적으로 벤트만 국장의 논문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국제 저널에 기고해도 손색이 없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서독 간 상호주의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서독이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 대신 친척방문 및 여행 조건을 완화시켜주었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점이 우리 정부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990년 2월 콜 수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고르바초프로부터 독일인의 자결권을 인정받았다. 즉, 독일인 스스로가 통일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결권이었던 것이다. 콜 수상의 모스크바 방문이 독일 통일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인 것이 분명하다. 그 이전에는 서독과 동독이 국가연합단계를 거쳐 통일로 가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콜 수상이 자결권을 획득한 후, 독일은 조기 통일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브로스 재판관께 질문하겠다. 서독은 통일될 날을 위해서 ‘헌법’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통일이 된 지금도 여전히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김 학 성 (충남대학교 교수)

두 분의 발제자는 독일 통일과 통합과정을 직접 관리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독일 통일 당시에 동서독 간 GDP 규모 격차는 4:1에서 10:1 정도로 추정되는 반면, 현재 남북한 GDP 규모 격차는 35:1이며, 인구 격차는 2:1로 추정된다. 남북한은 통일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의 통일정책은 분단관리였는데, 이는 통일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관리하는 정책이었다. 현재 통일대비와 분단관리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 상 만 (중앙대학교 교수)

청중의 질문을 소개하겠다. 1)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많은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하여 어떻게 그 사회에 정착했는지 궁금하다. 2) 독일 통일 과정 당시의 동서독 국민정서와 현재 남북한 국민정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3) 동독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서독으로 많이 이주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

질의응답

Jörg Bentmann (독일연방내무부 신연방정부 담당국장)

과거 동서독 간에는 비록 분단되어 있었지만, 가족단위나 단체, 교회를 중심으로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는 통일달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체성형성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방송교류도 존재했다는 점이다. 나는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은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독일 통일은 EU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두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확정했고, 이를 주변국들이 승인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일 통일의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독일과 EU 사이의 신뢰관계도 작용하였고, EU가 독일 통일이라는 실험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통일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년간 줄었다. 현재는 동독지역이 오히려 기회의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고학력의 젊은 인재들이 구 동독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

Siegfried Broß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독일 헌법의 명칭은 ‘기본법’인데, 이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 과도기의 헌법 명칭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통일 후 명칭을 ‘헌법’으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바로 통일의 형태가 가입 형태이기 때문이다. 기

본법 146조에 통일이 되는 날 헌법을 다시 제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독지역에 5개의 신 연방 주가 가입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146조가 사라지는 대신 관련 조항 23조와 전문이 수정되었을 뿐이다. 기본법이 헌법으로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다.

단계적 발전의 사례로는 유럽연합을 들 수 있겠다. 유럽연합의 경우 격차가 나는 국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통행(회원국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들을 마련했다. 예컨대 노동 및 고용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제재를 받는 쪽에서는 이런 방법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독일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철도청, 상하수도관리, 폐기물 처리 등이 민영화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재배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제2회의: 한반도 통일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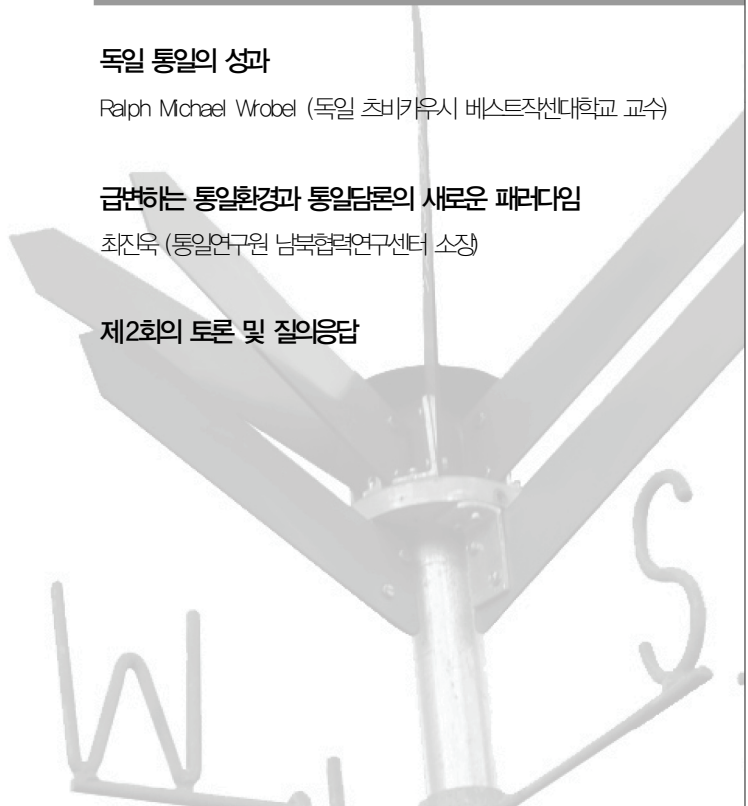
독일 통일의 성과

Ralph Michael Wrobel (독일 쾰른대학교 교수)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독일 통일의 성과

Ralph Michael Wrobel (독일 초비카우시 베스트작센대학교 교수)



:: Summary

거시적인 관점에서 독일 통일은 실패작이라고 할 수 없다.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독일은 국가 전체가 희열에 휩싸였다. 당시 헬무트 콜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수년 내에 동독에서 ‘번창하는 풍경’(blühende Landschaften)이 전개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많은 희망이 솟아올랐으나 독일 통일은 대다수 독일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결과가 되었다. 서독뿐 아니라 전체 독일 국민들이 막대한 통일비용과 동독경제 재건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생활여건 평준화 또한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동서독 국민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독일이 1990년에 통일된 주권국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통일로 인해 현재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 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독일 통일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변혁이 진행 중인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과 동독의 현재 사회경제적 발전 양상의 격차가 그간 놀라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서독의 체제를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동독에 대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었다. 이는 동독경제의 재건에 매우 신속히 착수할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어 동독에 커다란 혜택으로 작용했다. 동유럽 시장은 붕괴되고 있었던 반면 신속히 유럽연합에 가입한 독일은 서유럽의 공개 시장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다만 동독 재건의 과도기에 수많은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매우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독은 현재 아직 변혁기에 있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단연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동독 재건에 쓰인 비용의 대부분이 서독으로 다시 환원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동력이 되기도 했다. 동독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제 동독 주민들은 통일된 국가의 자유 시민일 뿐 아니라 서독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다. 동독의 인프라와 문화유산은 대부분 재건되었다. 평균수명 등 여타 사회적 거시지표들도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I. 독일 통일, 실망스러운 성공인가?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 옛 동독의 많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서독에 비해 여러모로 뒤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서독과 비교하면 동독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동독의 1인당 경제생산은 서독 수준의 71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률도 서독의 두 배 이상이다.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농촌인구 비율은 생산성 증대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독 경제는 서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뿐만 아니라, 동독인구 수는 1990년 이후 거의 2백만 명이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복지수당에 근거한 가계수입 규모 또한 서독보다 20퍼센트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동독 경제의 변혁과 발전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헬무트 콜 총리가 ‘변창하는 풍경’을 약속했으며 동서독 생활 여건의 신속한 평준화가 통일 목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는 아직 지속 가능한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도이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노버트 월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독일인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 매우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어떤 사안이 주어지면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을 끊임없이 숙고한다. 하지만 우리 독일은 통일 당시 매우 신속히 움직였다는 점에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당시 통일에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동독과 서독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점진적으로 맞추어 나가면서 두 국가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다소 장기적인 과도를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 초 이렇듯 굉장히 전문적인 시각에서 좋은 의도로 구상된 이 모든 계획이 필자의 관점에서는 매우 타당한 이유로 철회되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장기적인 구상대로 통

일이 진행되었다면 1989년 11월에 동독민주공화국(GDR) 정치인들에 의해 붕괴된 베를린 장벽이 이번엔 서독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서독으로부터 새로운 장벽이 올라가는 대신, 동독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무수한 노력이 1990년 이후로 꾸준히 지속되었다. 하지만 동서독의 주요 거시지표상으로 보아 이러한 노력이 기대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먼저 정치적인 통일이 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에 주어진 기회는 단 몇 달이라는 기간이었으며, 이 짧은 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0년간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은 약 1조 3천억 유로(미화 1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통일 비용’은 독일 경제 관련 문헌들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재정적인 노력의 성과는 동독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경제문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 통일의 혜택을 명백히 분석하고자 한다. 동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하겠지만, 독일 통일로 인해 동독뿐 아니라 독일 전체가 얻은 수많은 혜택 또한 주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독일이 직면했던 통일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기술한 문헌들을 분석하면 독일 통일이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II. 정치적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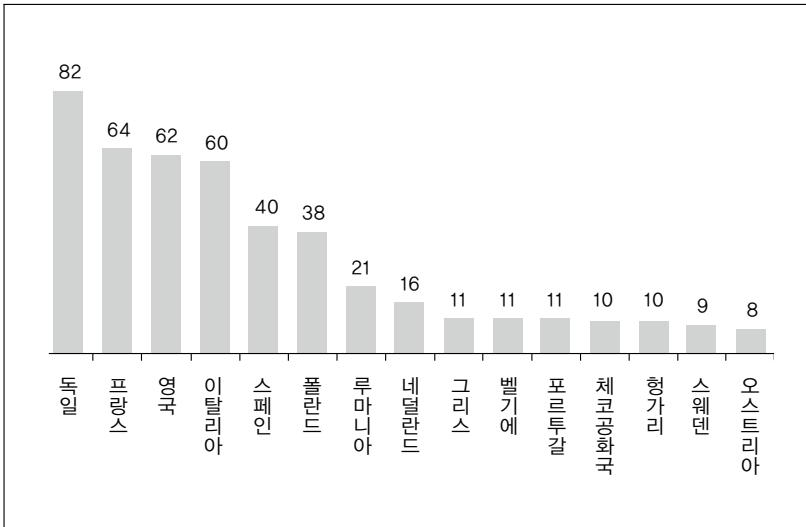
1. 완전한 자주권 회복

정치적인 관점에서 독일 통일의 가장 큰 혜택은 통일 독일의 완전한 자주권 회복이다. 1990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 점령국들은 이른바 ‘2+4 조약’이라 불리는 ‘독일 통일에 관한 최종처리 조약’에 따

라 독일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1994년 말까지 모든 소련 군대가 철수하기로 했으며, 이에 독일은 육군과 공군 병력은 34만 5천명 이하, 통합 병력은 3만 7천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또한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의 제조·보유·관리를 포기할 것과 핵확산방지조약의 전면 적용을 지속하기로 재차 단언했다. 또한 6개 신(新) 연방 주에 외국 병력의 주둔과 핵무기 및 핵무기 운송수단을 배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 지역을 영구히 비핵지대(NWFZ)로 만들었다. 2+4 조약에서 또 중요한 점은 독일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폴란드와의 국경을 인정하고 1945년 이후 진행된 국경선 상의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데르·나이세 선(線) 동쪽 지역에서의 향후 국경 분쟁을 예방했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전후 상황은 절대 끝나지 않았을 것이며 동서독은 더욱 오랫동안 점령국의 치하에 있었을 것이다.

〈그림 1〉 유럽 국가들의 인구(1990년)

(단위: 백만 명)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http://epp.eurostat.ec.europa.eu>)

2. 기타 정치경제적 중요성

또한 통일로 인해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 대국이 되었다. 1990년 독일의 인구수는 약 8천 2백만 명(1989년 당시 서독 6천 5백만 명, 동독 1천 7백만 명)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능가하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이로써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의 정치적 중요성도 커져, 이는 2007 리스본조약에 의한 유럽의회 의석수에도 반영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도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최고 수준이다. 2008년 독일의 GDP는 24억 6천 9백만 유로로, 프랑스의 19억 5천만 유로, 영국의 18억 1천 6백만 유로, 이탈리아의 15억 7천 2백만 유로를 훨씬 능가하였다. 다만 1인당 GDP는 평균 수준이었다. 오늘날 독일은 전 세계에서 10대 경제대국 안에 손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8년에 조사한 각국의 PPP 기준 GDP(단위: 미화 백만 달러) 결과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통일로 인해 1천 8백만 명의 소비자가 증가해 국내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고 국가 생산도 증가한 데 따른 혜택이다. GDP뿐 아니라 수출 측면에 있어서도 독일은 세계시장에서의 중요성을 더해 나가고 있다. 2008년 독일은 세계 수출 챔피언십을 중국에 양보했으나 세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성공은 이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3. 한 나라, 한 국가

통일된 하나의 국가라는 관념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적 목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적인 관점에서 모든 독일 국민들이 한 국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옛 동독의 바이마르에서 작품활동을 했던 괴테나 쉴러 등의 시인들의 유일한 고국은 이제 다시 통일 독일이 되었다. 또한 독일인들은 서독에서 동

독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이 한 개의 통일된 국가로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40년간의 정치경제적 분단 이후 하나의 국가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90년 독일의 냉전 종식과 통일로 독일 전체는 일시적인 희열에 휩싸였다. 하지만 많은 동독인들에게 이 기쁨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서독인들은 통일로 인해 서독이 ‘승리’했고 동독이 ‘패배’한 듯 행동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오시스’(동독인) 사이에 ‘웨시스’(서독인)에 대한 많은 반감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동독인들은 자신들을 ‘독일인’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동독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동독인들이 옛 동독정부가 제공했던 완전 고용 등의 혜택과 같은 옛 동독의 생활을 그리워했다. 동독에서는 옛 동독에 대한 향수를 뜻하는 ‘오스탈기(Ostalgie)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독일 국민 전체의 통일독일에 대한 자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월드컵 기간에 독일 국민들은 독일 깃발을 손에 들고 동독, 서독을 막론하고 외국인들과 더불어 승리를 자축하는 등 통일 국가로서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III. 경제적 혜택

1. 용이했던 체제 선택

중앙 및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변혁기를 거치면서 자국에 적용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했던 반면 동독은 통일을 통해 실제로 기능하는 시장경제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동독에서 서독의 체제를 적용하는 데에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먼저 1990년 7월 1일에 동서독 화폐통합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0월 3일에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서독인들은 동독에 점진적인 과도기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장벽을 세우는 대신 문호를 활짝 개방해 모든 이들

에게 주거·이동·표현·투표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독일의 기본법 그룬트게제츠(Grundgesetz)는 모든 독일인들에게 적용되었다. 모든 규정과 체제, 세금, 혜택, 독일 마르크 통화까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 다만 1천 7백만 동독인들은 필요한 조연자(회계사, 변호사 등)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관료체제라는 낯선 방식을 받아들이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통일 독일은 독일 신탁공사(Treuhandanstalt)를 설립해 국유자산을 신속히 민영화하기 시작해, 5년 내에 1만여 개에 달하는 동독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듯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으로 신규자본과 당시 절실했던 경영비법을 입수할 수 있었으며 다른 어떤 전략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창출했다. 기업들은 단시간에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연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나 다수의 서유럽 기업들과 미국 및 일본 기업들도 투자에 참여했다. 이러한 충격요법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으나,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의 1대1 전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수년 내에 모든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기능하는 법 체제뿐 아니라 자본시장으로의 접근, 기업의 주요 관리자들도 제공되었다. 신속한 법치체제의 구축으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신뢰도 또한 안정화될 수 있었다. 동독에서는 법 체제를 둘러싼 논쟁, 미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미약한 법 실행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독은 여타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욱 신속한 경제재건에 착수할 수 있었다.

2. 신속한 유럽연합 가입

1990년 과도기 과정에서 서독의 체제뿐 아니라 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유럽연합 조약·법제 및 관행 모음집인 ‘유럽연합규약’(acquis communautaire) 또한 동독에 성공적으로 전수되었다. 결과적으로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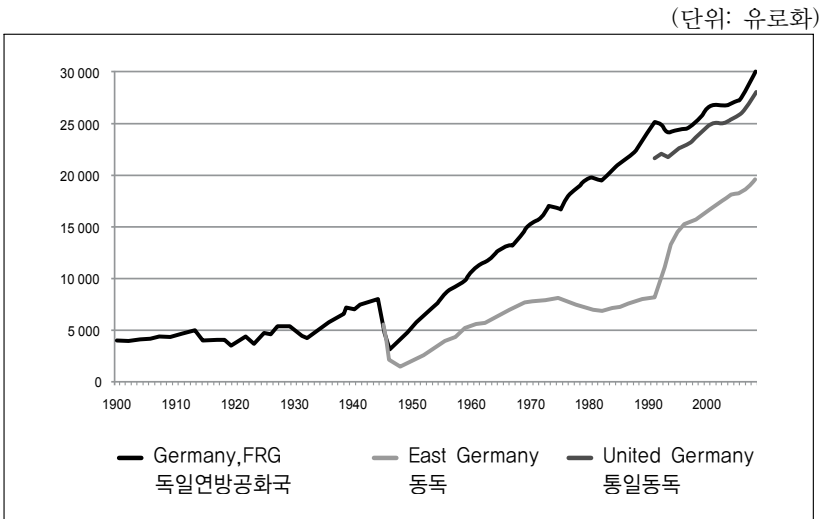
독은 통일 독일의 일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1990년 7월 유럽연합-독일민주공화국 관세연합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의 일원이 되었다. 동독 기업들에게 단일시장은 많은 이득과 불이익을 동시에 뜻하는 것이었다. 주요 혜택은 관세나 규제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러시아와 같은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은 당시 유럽연합에 속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유럽의 거대 시장으로의 접근 가능성은 커다란 혜택이었다. 통일 직후 동독의 서독행 수출은 붕괴되었다. 환율관리를 통해 제공되던 보조금이 끊기면서 수출품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은 과도기에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보다 더욱 빠르게 시장으로의 접근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이들 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과의 수차례 협상을 통해 변혁과정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2004년과 2007년에서야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으로의 동독의 신속한 개방은 무역에 중점을 둔 투자자들이 노동비용이 저렴하고 상품과 재화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동독에 신규 기업들을 설립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했다. 이와 동시에 단일시장 내의 자본의 자유이동으로 유럽 전역에서 동독에 대한 외국직접투자 물결이 이어졌다.

또한 유럽연합의 농업 및 구조적 정책하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동독은 사회·환경 프로젝트와 농업 생산을 실행할 수 있었으며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수많은 건축물과 기념물들을 재건할 수 있었다. 1991년에서 1993년에 걸쳐 동독에 대한 구조기금 지원은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핵심 조치였다. 이 조치의 목적은 동독 신(新) 연방주들의 유럽연합으로의 신속한 통합이었다. 인프라 구축, 생산성 투자, 농업부문 발전, 고용시장 발전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었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신(新) 연방 주들에 179억 유로의 유럽연합 지원금이 유입되었으나, 이는 서독이 같은 기간 동독에 유입한 9,800억 유로에 비하면 그나마 미미한 수준이다.

3. 1인당 GDP 개선

독일연방공화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한 반면 동독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경기침체와 1인당 GDP 하락이라는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통일 이후야 동독의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고 1인당 GDP도 두 배로 증가했다. 따라서 서독과 격차가 아직 벌어져 있다고는 해도 동독의 변혁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독경제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긴박감의 부재가 현재 동독경제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아직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번창하는 풍경’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동독과 서독 간의 생활여건에는 아직 많은 격차가 있으며 통일 당시 제시되었던 생활여건 평준화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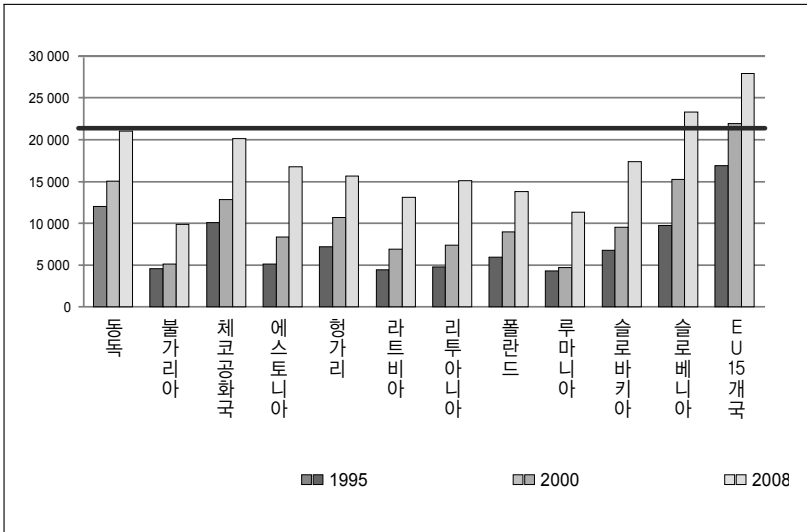
〈그림 2〉 독일 1인당 GDP 발전



출처: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

다만 필자는 동서독 생활여건 평준화를 동독 변혁 성공의 잣대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접근법이라 생각한다. 동독의 비교 대상은 아직 변혁기에 있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동독은 매우 성공적인 변혁을 이루어냈다. 이들 국가와 동독의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1995년과 2000년, 2008년에 각각 동독은 이들 국가에 비해 최고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했다. 다만 2008년에는 슬로베니아가 동독을 앞선 바 있으며 체코 공화국도 곧 동독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1인당 GDP는 동독이 이미 오랫동안 이들 국가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는 의미이다. 비교적 성공적인 변혁기를 거친 동독은 옛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에 비해 생활여건이 훨씬 개선된 것이다.

〈그림 3〉 동독과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의 PPP 기준 1인당 GDP(1995, 2000, 2008)



출처: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

물론 동독의 많은 지역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농촌인구가 주로 서독의 밀집지역으로 떠나고 있으며 농촌에는 노령의 저교육 인구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예나, 에르푸르트 등의 동부 도시들은 지난 20년간 비교적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작센 주의 라이프치히와 쾰니츠, 츠비кау 삼각지역은 자동차산업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성공적인 하이테크 기업들도 동독에 상주해 있으며 연구소와 대학들도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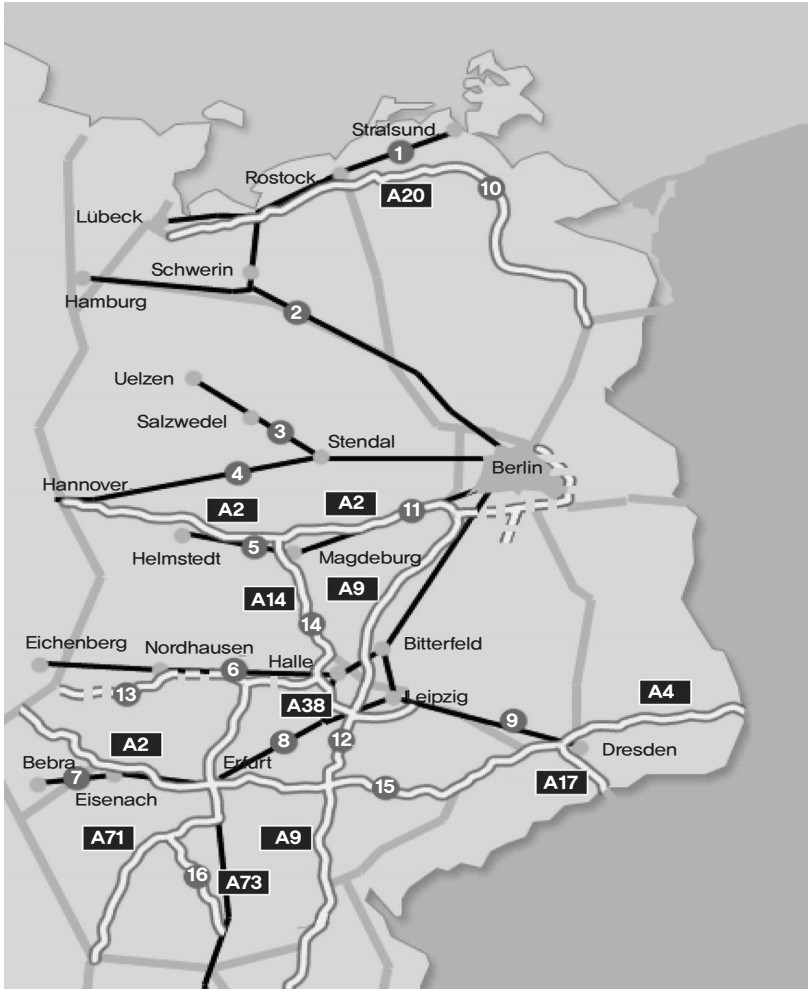
독일 통일이 서독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 초반 서독 전역에는 이른바 ‘통일 붐’(Wiedervereinigungsboom)이 불었다. 동독에 대한 수많은 독일 민간 투자로 1990년대 초반 유럽에 닥친 경기침체를 그나마 상쇄할 수 있었다.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많은 상품과 재화를 들여오면서 독일은 외부의 경기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높은 성장률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다만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경기사이클이 과열되면서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동독에 투자한 자금이 서독으로 다시 환원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서독 기업들이 동독 재건과정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Aufbau Ost)은 서독경제에도 지난 20년간 꾸준히 경제부흥책으로 작용해 온 셈이다.

4. 인프라 개선과 문화유산 재건

‘독일 통합을 위한 교통프로젝트’(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 체제하에 1991년부터 고속도로와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7개 인프라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동독에 수많은 연방 고속도로와 철로가 개설되었다. 전화통신망 또한 현대화되었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동독에 380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건설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이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현재 완료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는 데 있

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독이 동독 인프라 현대화에 보여준 의지였다. 이것이야말로 독일 통일의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동독의 인프라가 서독보다 훌륭한 경우도 종종 있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 서독을 위한 추가 인프라 구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그림 4〉 동독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출처: 중부독일 방송사 MDR(<http://www.mdr.de/nachrichten/6840354.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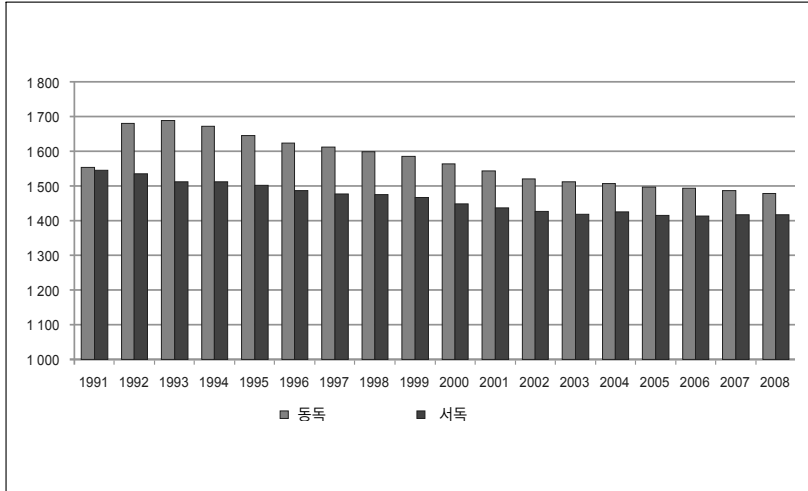
도로 및 철로뿐 아니라 통신시스템도 개선되었으며, 각 도시의 하수 시설도 새로 구축되었고 주택정비 및 고성당과 고성 보존작업도 이루어졌다.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발전소 및 화학공장은 폐쇄되거나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재구축되었다. 동독 재건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이어져, 드레스덴의 성모교회 재건 프로젝트는 대부분 민간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부터 명목상으로 독일의 수도로 지칭되어오던 베를린이 1990년대 말 실질적으로 완전한 수도로 탈바꿈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베를린은 정치, 집회, 문화,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활기찬 도시가 되었다.

5. 주요 사회적 거시지표들

동독은 지난 20년간 통일로 인해 촉발된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과 서독으로부터의 유입으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이는 일부 사회적 지표들에도 반영되어 있다. 동독은 서독에 비해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구매력도 낮지만 이외 지표상으로는 서독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다. 도표 5에서 보듯이 동독과 서독의 연간 근로시간은 비슷한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 1993년 동독의 연간 근로시간은 서독보다 12%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그 폭이 4.4%로 줄어들었다. 이는 동독과 서독의 생활여건 수준이 점차 동일해짐을 의미한다.

〈그림 5〉 동서독 연간 실질근로시간 수렴양상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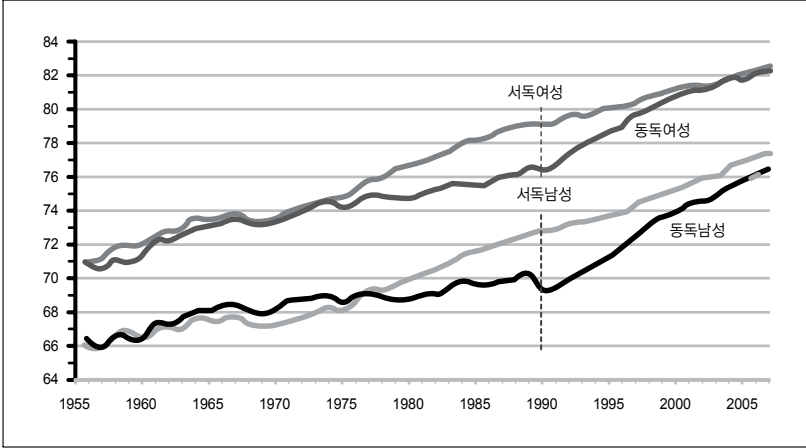


출처: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

또한 통일 이후 동서독 평균수명 수준도 비슷해지고 있다. 독일분단 초기에는 평균수명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동독의 일부 산업생산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동독의 갈탄 발전소와 화학부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부터 이러한 공장들은 폐쇄되거나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재건되었다. 그 결과 통일 후 동독의 평균수명 개선은 환경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신속한 재건은 서독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동독이 통일로부터 얻은 주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독일 평균수명

(단위: 년)



출처: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

IV. 요약

본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듯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독일 통일은 실패작이라고 할 수 없다.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독일은 국가 전체가 희열에 휩싸였다. 일부 전문가들만이 독일 정치인들에게 단기과정 통일과 그 비용에 반대하는 조언을 제시했을 뿐이다. 당시 헬무트 콜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수년 내에 동독에서 ‘번창하는 풍경’이 전개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콜 총리는 당시 동독의 경제력을 다소 과대평가한 면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수많은 희망이 솟아올랐으나 독일 통일은 대다수 독일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결과가 되었다. 서독뿐 아니라 전체 독일 국민들이 막대한 통일비용과 동독경제 재건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생활여건 평준화 또한 아직 달성되지 못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서독 내에서도 생활여건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경제적 격차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독의

생활여건 수준은 독일 통일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올바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독일 통일은 동서독 국민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독일이 1990년에 통일된 주권국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통일로 인해 현재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시스’와 ‘웨시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국가 분열양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독일 국민 전체의 통일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상생 발전의 희망이 엿보인다. 경제적으로도 독일 통일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변혁이 진행 중인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과 동독의 현재 사회경제적 발전 양상의 격차가 그간 놀라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서독의 체제를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동독에 대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었다. 이는 동독경제의 재건에 매우 신속히 착수할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어 동독에 커다란 혜택으로 작용했다. 동유럽 시장은 붕괴되고 있었던 반면 신속히 유럽연합에 가입한 독일은 서유럽의 공개 시장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물론 서독의 복잡한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단일시장 내의 경쟁에 부딪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동독 재건의 과도기에 수많은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매우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독은 현재 아직 변혁기에 있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는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단연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동독 재건에 쓰인 이른바 ‘통일비용’의 대부분이 서독으로 다시 환원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독은 성공적인 변혁을 이루어낸 한편 서독은 통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동독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

택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제 동독 주민들은 통일된 국가의 자유시민이며 동독의 인프라와 문화 유산은 대부분 재건되었다. 평균수명 등 여타 사회적 거시지표들도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동독에는 향후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독일 통일은 단연코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I. 머리말

올해는 합일합방 100주년, 6.25전쟁 60주년,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통독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통일논의가 관심을 끌고 있고 독일 통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었던 독일 통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바뀌어 전달되고 있다. 통일 이후 초기의 과다한 통일비용 지출, 심리적 통합 실패, 사회적 혼란이 부각되었으나, 이제 동독 지역의 성공적인 체제이행, 통일 독일의 경제적 부흥, 국가브랜드의 가치 상승, 유럽 통합과 안보환경의 개선 등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¹

지난 2월 방한한 독일의 쾰러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 것과,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 보다는 분단관리에 입각한 우리의 기존 통일담론에 경종을 울리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새로운 통일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통일환경에도 불구하고 통일담론이 기존의 논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통일논의의 핵심은 통일준비이다.

본 고의 목적은 왜 통일준비가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공론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탈냉전 이후 통일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분석한 후, 통일준비를 위한 우리의 과제들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¹ 서재진, “통일비전과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기초연설, 2010.9.17), pp. 2-5.

II. 탈냉전 20년과 통일환경의 변화

1. 탈냉전과 화해·협력

냉전 종식 이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은 남북관계에서 지고지순한 원칙으로 등장하면서 일대일 통일, 합의통일, 수렴론 등 ‘평화적’ 담론이 통일논의를 지배하여왔다. 과거 불신과 대결을 끝내고 다방면에 걸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 거쳐 정치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1989년 등장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전의 정치·국가 중심에서 사회·문화 중심, 민족중심의 통일로 논의의 틀을 전환한 것으로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였다.² 이는 유럽의 통합과정 혹은 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 북한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낙관적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민족중심, 사회문화중심의 통일정책 기조는 햇볕정책하에서 극적으로 강화되었다. 전례 없는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되면서 ‘통일정책’은 북한을 관리하고 남북관계의 현상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대북정책’으로 대체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의 이미지보다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지도자로서 인식함으로써, 타도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북정책의 주된 관심이었다. ‘법적인 통일’ (de jure unification) 보다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인정,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 (de facto unification)을 이루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다.³

²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편,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립배경 및 남북관계,” 『통일노력60년: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서울: 도서출판 다혜, 2005), p. 209.

³ 김근식,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6.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4호 겨울호 통권 43호(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p. 169.

통일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상 통일문제는 가급적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 놓고 경제·사회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양적 확대를 남북관계 발전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2. 통일환경의 변화: 북한상황을 중심으로

가. 북한의 폭정체제와 개혁·개방 거부

선군정치하 북한체제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보다는 폭정(tyranny)이라는 개념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주의는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도의 억압과 고도의 충성을 이용한다. 전체주의 독재자는 충성심이 높아지는 한, 억압을 증대시킴으로써 권력을 확대하나, 억압이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켜 충성심이 저하되는 시점이 오면 억압을 중단하는 것이 권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본다. 반면, 폭정은 백성들이 부유한 것 보다는 궁핍한 것이 권력유지에 더 유리하다는 믿음하에 오직 억압에 의해서만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폭정하의 백성들은 독재자를 따르거나 충성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항거할 능력도 없다. 군이나 경찰과 같이 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들에는 국민들로부터 착취한 자원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⁴

전체주의 성격이 강하였던 199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에서는 충성과 억압을 결합시키는 데 당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당의 생활지도 및 정책지도가 체제유지의 관건으로 여겨져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폭정의 성격이 강한 북한에서 통제 위주의 통치가 강화되면서 당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당·국가체제가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외부의 위협을 막고 내부의 일탈행위를 억압

⁴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59.

하는 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다. 즉, 당의 상대적 위상약화는 군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억압과 통제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와도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폭정은 체제 성격상 경제발전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이를 체제 유지에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거부한다.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하여 고립을 선호하며 외부의 지원이나 경제협력 역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실제로 북한의 폭정하에서 인민경제는 붕괴되었으나 수령경제, 당경제, 제2경제에는 부족한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었고,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나. 북한의 핵보유 고집

북한은 2009년 들어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의 의도는 2009년 2월 방북한 미국의 민간 대표단에 분명히 전달되었다. 북한은 불능화 단계를 검증 없이 종료하고 폐기 단계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며 폐기 단계에서 경수로 지원을 조건으로 플루토늄 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제외한 채 플루토늄 관련 핵시설과 핵 프로그램을 '비핵화'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핵무기는 이후 단계에서 미·북간 핵군축 협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비핵화 세 단계인 동결(shutdown), 불능화(disablement), 폐기(dismantlement) 단계에서는 핵시설과 핵 프로그램을 다루며, 핵무기는 4단계인 제거(elimination) 단계에서 핵군축 협상차원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⁵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에 대한 반발로 6자회담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북관계가 평화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2월 보스위즈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시 북한은 “핵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임”을 주장하며 평화협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현 단계에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고위급 정치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도식 핵보유 국가 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수용과 군수용 핵시설을 분리해서 민수용 핵시설에 관한 핵협정을 맺고 여기에 핵무기는 제외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2.13 합의 후 뉴욕 미·북관계정상화 회담에서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을 인도처럼 대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입장도 비핵화에 앞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즉,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한 미·북 신뢰조성이 있어야만 핵시설 가동 중단을 넘어서 핵무기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⁶

다.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2000년대 들어 북한은 남북교역의 흑자를 통해 대중국 무역적자를 상쇄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년 여간 우리의 대북지원 감소와 남북경협이 축소로 10억 불 이상 손실을 보았으며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 핵실험, 간부용 선물비용 등으로 수억 달러를 낭비하였다.⁷ 국내 재원의 축소는 당, 군, 보위부 등 핵심

⁵- Morton Abramowitz, “North Korean Latitude,” *National Interest*, No. 100 (March-April, 2009).

⁶- 박형중, “북한의 6자회담 전략 변경과 향후 전망,” (Online Series Co 10-34, 2010. 9. 8).

⁷- 최진옥, “북한의 대남 비방·협박과 남북관계 전망,” 『분단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로』 (통일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2009. 4. 8).

기관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면서 부처 간, 엘리트 간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경협의 중단과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로 경제난이 악화되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었다. 이미 화폐개혁 실패로 혼란에 빠진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대북 제재조치 중 대내 차원에서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역 중단이다. 2009년 기준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총액은 7.4억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 50.9억 달러의 14.5%를 차지한다. 남북 교역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손실은 일반교역 2억 1,087만 달러, 임가공료 3,175만 달러, 운송수입 감소액 900만 달러와 선박운항금지로 인한 비용상승 100만 달러 등 총 2억 5,262억 달러에 이른다.⁸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는 북한의 돈을줄을 총망라하여 제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의지에 따라 북한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⁹

라. 김정일의 건강악화

김정일 특유의 정치방식이라는 선군정치는 제도적 통치가 아닌 인적통치, 당적 지도가 약화되고 당을 거치지 않는 김정일의 직할통치, 주요 기관들의 유기적인 횡적 연대가 차단되는 분할통치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¹⁰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김정일 1인에게 집중되는 특성상 권력의 운영에 김정일의 역할이 필수불가결이었다. 따라서 2008년 8월 시작된 김정일의 건강이상은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⁸ 임강택,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Online Series Co 10-17, 2010. 5. 24).

⁹ 최진욱, “미국의 대북추가제재: 의미와 전망,” (Online Series Co 10-32, 2010. 8. 9).

¹⁰ 최진욱, “김정일 건강악화 이후 북한의 통치방식 변화와 대내외 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11권 7호 (KDI 한국개발연구원, 2009), p. 29.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건강이상 직후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비공식 지명하였고, 2년만인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경험 없는 후계자의 준비되지 않은 등장과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단행된 권력구조의 재편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장성택, 김경희, 이영호, 최용해 등 신 실세 그룹의 부상 이후 당적 통제강화 기도로 인한 당·군 간의 갈등 가능성, 급격한 세대교체로 인한 군 원로그룹의 불만 가능성, 김정일 이후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에 대한 신 실세 그룹의 변함없는 지지 여부 등이 주목된다.

Ⅲ.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상황의 악화에 따라 기존의 통일담론도 벽에 막히게 되었다. 통일의지가 실종되고, 국가신용도 상승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 통일의지의 실종

기존 통일담론은 통일보다는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화해·협력 기조 속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보다는 교류협력의 확대가 보다 중요한 대북정책의 목표인 것처럼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확대와 북한의 변화를 단선적인 관계로 낙관하였던 기존의 통일담론은 북한의 변화거부와 핵무기 고집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통일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통일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 보다는 여전히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양적 팽창에 매달렸다.

기존 통일담론에서는 남북의 이념과 체제가 너무 다르고 막대한 통일비용도 우려되니 당장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통일의 원칙이나 통일의 미래상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로 남북한이 조금씩 양보하는 수렴론과 심지어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대일 통합’ 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통일비전이 불투명해지고 통일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도 서서히 사라졌다.

IMF 경제위기와 함께 독일 통일의 후유증이 과장되게 인식되면서 엄청난 통일비용이 거론되기라도 하면 남아있는 통일의지마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남북 통일은 비전과 희망의 대상이기 보다는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되었다.

금년 8월 통일연구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제적 위상을 제외하고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빈부격차, 물가, 실업문제, 지역격차, 주택문제, 법치문제, 가치관 혼란 등 모든 분야에서 통일 전에 비해 통일 후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¹¹ 국제적 위상을 제외하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9.4%~32.5% 인데 반해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0.7%~69.6%였다. 특히, 통일비전에 대한 신념의 약화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47.5%)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53.5%)보다 적었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불과 27.7%로 이익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 72.3%보다 훨씬 적었다.¹²

¹¹ “귀하께서는 통일 후 다음 사항들이 통일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개선될 것이다, 대체로 개선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체로 악화될 것이다, 매우 악화될 것이다”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8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수 1,000명, 표본오차 ±3.1% (95% 신뢰수준)이다.

¹²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2. 국가신인도 상승에 장애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디스나 S&P와 같은 신용평가회사들은 올 들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평가 시 북한의 급변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우려는 북한의 붕괴 자체보다도 한국이 정치적, 법적, 재정적으로 얼마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재원조달 방안, 재정부담 능력, 통일비용의 최소화 방안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막대한 통일비용과 통일에 대한 준비 부족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해치는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 미비, 그리고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급변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으며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이외에 조기통일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소극적 통일외교

주변 4국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에 주목하며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0년 9월 9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시 급변사태를 대비한 북한 안정화 작전을 하였다”고 공개하였다. 작년 4월부터 북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0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1,213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로, 95%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는 ±3.1%이다. 박명규 외, 『200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08).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다섯 번째 언급이다. 워싱턴의 관료들과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다.¹³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 문제, 납치자 문제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통일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¹⁴ 러시아는 2003년 8월에 이어 지난 7월 초 연해주 하산에서 북한의 대규모 난민 유입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한반도 분석가들 역시 포스트 김정일 권력구조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입장과 구별되는 입장을 보이는 유일한 나라이다. 두 번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 급변사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누구와도 논의하려하지 않고 있다.¹⁶

그러나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북·중관계는 급속히 밀착되고 있다.¹⁷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

13. Paul B. Stares,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신병철, 전경주 역, 『북한급변사태의 대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김정수, 재인용.

14. Victor Cha, "Korean Unification: an American Perspective," (Third KINU Unification Forum, Lotte Hotel, Belle-Vue Suite, September 8, 2010).

15. 신상진, "중국의 대북한 인식변화 연구: 북한 전문가 심층 면담 조사," 『통일정책연구』 17권 1호 (통일연구원, 2008), pp. 275-276.

16. Victor Cha, "Korean Unification: an American Perspective," (Third KINU Unification Forum, Lotte Hotel, Belle-Vue Suite, September 8, 2010).

17. 최근 중국과 북한의 밀착은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90년대 20%대에 머물던 대중국 교역은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78.5%에 이르렀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은 2000년부터 총 여섯 차례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러시아를 한 차례 방문하였을 뿐이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은 대중국 의존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받아 들이고 있다. 5월 방중 시 후진타오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내정 및 외교,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협력 강화" 등 5개 제안을 제기한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의지를 노골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8월 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을 극찬하고 북·중 경제무역협력과 관련한 중국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였다. 중국이 추진중인 '창춘-지린-투먼 개발'에 중요한 나진항과 청진항의 자유로운 사용권과 경제특구의 노무관리, 출입국관리, 투자보장 등 여러 가지 안 전장치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위해 무리를 하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용인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중국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나진 지역에 경제특구가 설치되고 중국의 노동력이 대거 진출할 경우, 향후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구실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의 논의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북한 붕괴 시 국제적 관리(신탁통치) 방법, 자국의 개입 가능성, 북핵 관리, 난민 처리, 소형 무기 확산 방지 등 다양한 의제가 우리와 무관하게 논의 중이거나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이들 나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남북 간 합의통일이 우리의 목표이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 가능성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제까지 고수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IV.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1.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회복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실종된 통일담론의 부활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통일 의지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통일비용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알려야 한다. 또한, 통일이 가져올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통일 의지를 고무시켜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금년 8월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통일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응답(‘매우 찬성한다’ 17.5%, ‘대체로 찬성한다’ 59.1%)이 76.6%에 달하였다.

이미 통일환경 분석, 체제전환 및 통일 사례의 긍정적 측면 분석, 통일 비전 개발 등 통일관련 논의들이 시작되었다. 통일 의지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일비용이 너무 과장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통일비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구자의 목적과 방법, 통일의 방식,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목표치 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¹⁸ 천문학적 수치만 충격적이게 제시됨으로써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우리는 큰 피해를 입게 되니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붕괴를 막고 통일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¹⁹

둘째, 통일비용은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계산하지 않고 투입된 비용만 계산한 것이나, 실제로 통일이득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²⁰ 여기에는 통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분단비용, 통일비용을 투입해서 북측의 경제건설과정에서 얻게 되는 남측의 경제적 이득, 장기적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편익의 증대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¹

셋째, 통일편익과 연관된 것으로 통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8. 김정수,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제안 배경과 실효적 논의를 위한 제안,” 미발표 논문, p. 13.

19.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통일연구원 세미나, 2010. 9. 1), p. 22.

20. 서재진, “통일비전과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제주지역학교 통일교육 대토론회 기조연설, 2010. 9. 17).

21.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통일연구원 세미나, 2010. 9. 1), p. 24.

군사안보적으로 남북 통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해치던 악재들이 해결된다. 대규모 국방비 절감,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한 투자기피 해소, 신용등급 상승 제약 요인의 제거 등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치외교적으로 북한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소멸되면서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에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계기로 역내 통합과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고양시킴으로써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남북 통일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다.²² 국방비와 같은 분단비용의 감소와 동북 3성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장기회의 창출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 등이 모두 통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들이다.

사회문화적으로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적대감을 치유하고 지역주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적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대다수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독일과 같이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조 7천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통일비용과 같은 부담을 남북 통일 시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준비를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논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²²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중국·홍콩식의 관리가 가능하다면 통일한국의 실질 GDP가 2050년 6조 5천억 달러로 프랑스, 독일, 일본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Kwon Goo-ho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1)," *Global Economic Paper*, No. 188, Goldman Sachs (September 21, 2009).

- (1) 기존의 통일정책과 같이 통일비용과 사회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진하며 통일을 가급적 뒤로 미루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 (2)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동시 실현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이 바람직한가?
- (3) 조기 통일 시 통일비용과 사회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4)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 (5) 북한의 붕괴조짐이 나타날 때 이것을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붕괴를 지연시키고 북한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가?
- (6)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노력과 지원은 필요한가?
- (7) 남북대화와 통일준비는 병행할 수 있는가?

이 밖에도 통일방식에 대한 많은 쟁점이 있겠으나 우선 통일비용을 줄이고 우리가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북한을 관리하고 남북관계의 안정만을 희구하는 소극적 대북 정책에서 탈피하여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준비에는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성역 없이 포함될 것이나 북한을 급변사태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와는 구별된다.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대비 자체는 북한의 난민발생, 소형 무기의 확산,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등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권리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도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동시에 추진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도 피할 이유가 없다.

둘째,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북한에 확산시

키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민주주의 확립과 경제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국이 민족적 책임감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지난 60년간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러한 발전과 복지의 혜택에서 소외된 북한 주민의 처지에 대해 동정심과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이념, 인권, 민주주의, 경제력 등 남북 간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수렴론, 일대일 통일과 같이 한때 통일논의를 주도했던 담론들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²³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장된 통일비용 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통일편익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비용은 정의상 한시적인 것이고 통일편익은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언제나 크다.

그러나 통일편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비용은 통일시점부터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그에 따른 편익은 통일비용이 투자된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²⁴ 다시 말해서 통일비용은

23. 첫째, 과거 서독의 동방정책을 예로 들어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가 남북 양자 조급씩 양보하는 수렴론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 상태의 북한을 수렴한다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사실 동방정책 역시 서독이 형성한 게임의 장으로 동독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독일과 달리, 남한의 경제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을 폄하하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연방제든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일대일 통합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남북 간 엄연히 존재하는 체제·이념 등 이질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수령제와 통합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24. 통일비용과 통일이익의 발생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이석, “통일의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KDI 북한경제리뷰』, 제12권 8호 (KDI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7-11.

당장 현 세대가 겪어야 할 부담인 반면 통일편익은 대부분 다음 세대가 미래에 누릴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발생 기간별 불일치로 비용 대 편익의 논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편익이 비용 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추진해야 할 통일세대가 과중한 부담 때문에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전을 개발하는 일 못지 않게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이를 실행하는 것이 통일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기 통일 시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통일 후 급진적 경제통합 보다는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급진적 경제통합의 경우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 한국사회와 유사한 교육/훈련/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점진적 경제통합의 경우 북한지역을 경제적으로 분리 관리하여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발생 일정이 장기간 걸쳐 발생되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홍콩식의 일국양제, 특별행정구역, 경제특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점진적 경제통합의 추진 여부와 형태는 통일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정치통합이 이루어지면 통일 한국의 동등한 유권자가 된 북한주민들이 우리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이들은 당연히 급진적 경제통합을 원할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통제가 더 이상 통일 이전과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통일 이전 남북경협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규모와 속도 등 조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규모 경협이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의 경제주체가 남한과 시장경제에 우호적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²⁵ 이는 단순한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²⁵ 이석, “통일의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KDI 북한경제리뷰』, 제12권 8호(KDI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22.

북한체제의 질적 변화를 전제로 북한경제의 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이전의 남북경협은 상대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사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통일준비 실행

통일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통일준비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준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는 인력양성, 법적·제도적 준비, 재정적 준비, 통일교육, 통일외교 등이 포함된다. 남한의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은 통일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을 분리 관리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제단위의 성격에 맞추어 북한지역 주민들의 참정권 및 선거제도, 보건제도, 교육제도, 사법제도 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통일 이전 철도, 도로, 항만 등 북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체제의 질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전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도 통일 기금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통일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대외적으로 남북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면서 우리의 통일비전을 주변국과 공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통일외교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통일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최근 통일논의가 급증하게 된 것은 북한 요인에 기인한다. 북한상황의 악화로 기존의 통일담론이 한계에 이르고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통일담론은 통일을 막대한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위협적이고 두려운 것으로 간주하면서 가급적 먼 훗날의 일로 미루려고 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통일을 긍정적 기회로 간주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이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통일이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잘 준비한다면 조기 통일의 기회를 피할 이유는 없다.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비용에 비해 이득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다. 통일을 통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무기, 미사일 위협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에 엄청난 긍정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통일준비는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투자이다. 통일준비가 전혀 없었을 때 갖던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통일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으로 전환될 것이다.

새로운 통일논의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통일이 반드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다. 통일의 기회는 올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없다면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2회의 토론 및 질의 응답



최 대 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브로벨 교수의 논문과 내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0월 3일 독일 통일 20주년 행사의 장면을 보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브로벨 교수 논문에서 인상적인 것은 독일이 폴란드 영토를 인정했던 것이다. 독일 정부 차원의 의지도 있었지만 독일 시민사회, 특히 독일 교회가 2차 대전 때문에 그 지역을 폴란드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최근 통일세 이야기가 위로부터 이뤄진 논의라면 독일의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셈이다. 이러한 성숙된 독일 시민사회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문 말미에 동독 재건 과도기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 오류나 실수의 사례를 언급해주시면 좋겠다. 현재 북한은 체제전환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한국이 통일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충언해주시면 좋겠다.

최진욱 박사의 발표문과 관련해서는 본문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틀에 대한 토론이 마땅할 듯하다. 전체적인 논문의 방향에 동의한다. 특히 통일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할 것이 있다. 최진욱 박사께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9년 것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통일담론의 새 패러다임 전개과정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

통일비용에는 그 구체적 과정과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통일논의를 할 때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

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통일담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산시켜나가야 할지 더 연구해야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주류가 받아들여야하고, 여야도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시민사회가 이를 수렴해야 한다. 밑에서부터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야, 시민사회가 공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를 이끌어 내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통일, 대북정책에는 국내 정치적 요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 통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주변국에게는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도 염려된다. 국가 간 신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담론을 확대 하는 과정에 부작용은 없을지 생각해야할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통일담론을 확대해 나가되 조용하고 차분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영 중 (중앙일보 차장)

군 복무 시절 독일 통일을 맞았다. 복학을 하고보니 당시 통일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신문방송학과 최고의 화두였다. 20년이 지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그 당시의 열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마침 중앙일보가 통일재원 마련 관련하여 기획취재를 했었다. 적립식 기금형태의 협력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어떤 형태로든 국고에 환수하지 말고 통일재원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그때 경제부처 및 해외전문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치적 시각차가 크다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느꼈던 이러한 고민들을 최진욱 박사께서 이론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한다. 통일재원 패러다임

이 바뀌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가 예산 1%를 통일기금으로 쓰자고 제안했고, 그 다음에는 국회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이론적 틀을 제시했었는데 한계가 있는 듯하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는 통일세 담론이 나온 직후에 통일비용과 관련한 기획취재를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최진욱 박사의 발표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제기하고 싶다.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공론화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론도 이 부분은 사실 성역화 되어 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급변사태 및 김정일 건강에 대한 거론을 꺼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이명박 정부도 이를 넘어서기 쉽지 않은 듯하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을 겪으면서 ‘대화는 선이고 단절은 악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도전받고 비판받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성역 없이 급변사태를 거론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국민들의 부담감 및 거부감을 정부는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정부가 급변사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는 것이 전략적인 접근방식의 하나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고민이 있다.

브로벨 교수의 발표내용 잘 들었다. 어두운 이야기 보다는 현재 독일의 상황, 발전상, 번영상 등 밝은 미래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러나 통독의 교훈을 배우자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인데, 독일과 남북한의 상황이 달라서 그런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통일이 요원한 현실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독일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다. 과거 통독 직전 동서독 상황 정도만 돼도 훨씬 통일이 쉬울 것이다. 따라서 과연 남북한 상황에 통독 당시의 동서

독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고 성 준 (제주대학교 교수)

20년 전 독일 통일 이후 매년 한 번씩 독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며 가졌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후유증, 비용의 걱정, 마음의 장벽 등 우리 기자들 눈에 비춰졌던 독일 통일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독일 통일이 통일부담보다 통일편익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셨는데, 구 동독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독일 통일의 편익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브로벨 교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첫째, 정치경제적 편익과 혜택을 많이 언급하였는데, 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통일 후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동독 지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는가?

지난 10년간의 남북 관계를 돌아볼 때 통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주입 당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실종된 통일의지라는 말이 매우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런데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가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우리의 통일준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불안정한 북한상황을 들고 통일의 당위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급변사태 준비도 통일의 당위성이 되기 어렵다. 나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통일준비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의 변화이다. 급변사태 아니면 개혁개방이다. 학자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북한 체제가 바닥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다. 아주 적은 가능성이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핵을 포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며 이것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고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그리고 최 박사님의 발표문에서 우리 정권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민족 통일방안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마 전 서재진 원장님께서 독일의 통일이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셨는데, 청중들은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오피니언리더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독일 통일 사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재원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통일 재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이야기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고 통일세 여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제 성 호 (중앙대학교 교수)

동서독과 남북한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동서독은 전쟁이 없었고 분단시기에도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서베를린의 존재이다. 1986년에 동서독은 상호 방송을 개방하여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TV를 시청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에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89년에 동독에서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콜 총리가 통일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동독주민들이 서독 편입을 선택한 통일이었고 서독이 이를 받

아들었던 것이다. 서독이 외교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한 것이다. 절차와 형식면에서 오히려 합의라는 방식을 거쳤다.

나는 서독 통일정책은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키며 평화공존을 앞세운 정책이었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다고 생각한다.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천명하고, 인도주의의 구현, 접촉을 통한 변화를 밝혔다. 그리고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국제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우리 사회는 간도문제 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통일과정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남북 간의 원만한 사회통합과 통일에 있어서 공산당 고위 당원들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반체제 세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동서독의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최진욱 박사의 발표문에 통일의지, 통일비전, 통일준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통일의지를 함양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과거의 통일교육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만을 계속 강조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황, 군사적 대결의 지속, 북한의 공갈협박 등 현실상황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 남한은 섬나라이다. 이것 역시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다. 분단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통일은 재난일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통일은 변영의 기회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필요하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교류협력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얼마 전 민족이야기 보다는 다른 통일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미래상을 분명히 설정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의 가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하나의 방안이고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방안이 가정하고 있는 방향은 점진적이고 낙관적인 통일이다. 하지만 현재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 이외의 선택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음은 급변사태에 관한 것이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그렇다면 왜 급변사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국가 신임도 때문이다. 주변국들의 논의에 대해 무대응으로 나온다는 것에 관한 자괴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건물을 예로 들면, 건물이 무너질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무너뜨려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대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이어서 민족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주변국에 배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 동북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주변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일의 재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나는 동의한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통일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논의는 특정 정파가 만들어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의 통일방안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말해왔던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안뿐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통일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제성호 박사의 지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경우 발생하는 재앙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특별행정구역, 경제특구 등을 제시했다. 북한 당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북한을 지원할 것이고, 그 이후에 통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통일이 될 것이다.

Ralph Michael Wrobel (독일 츠비카우시 베스트작센대학교 교수)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는 크게 세 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실수였다. 바로 동서독 화폐를 1:1의 환율로 변환했던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이지만 환율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임금이 올라갔고 추가적인 동독의 실업률이 발생했다. 두 번째는 독일의 민영화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다. 세 번째, 너무 많은 보조금을 동독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쏟아 부었다. 경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정치적으로는 필요했었다.

독일의 통일이 한국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독일과 한국이 매우 다른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독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통일에 대한 시간적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적인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후에도 결국 돈 문제로 또 다른 벽을 쌓아갔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유입사태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독일이 어떠한 실수를 범했었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원하는

다면 실수를 받아들여야 하며, 통일세나 통일기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어떻게 북한 기업들을 민영화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동독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동독과 서독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없으나 나이든 사람들은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제3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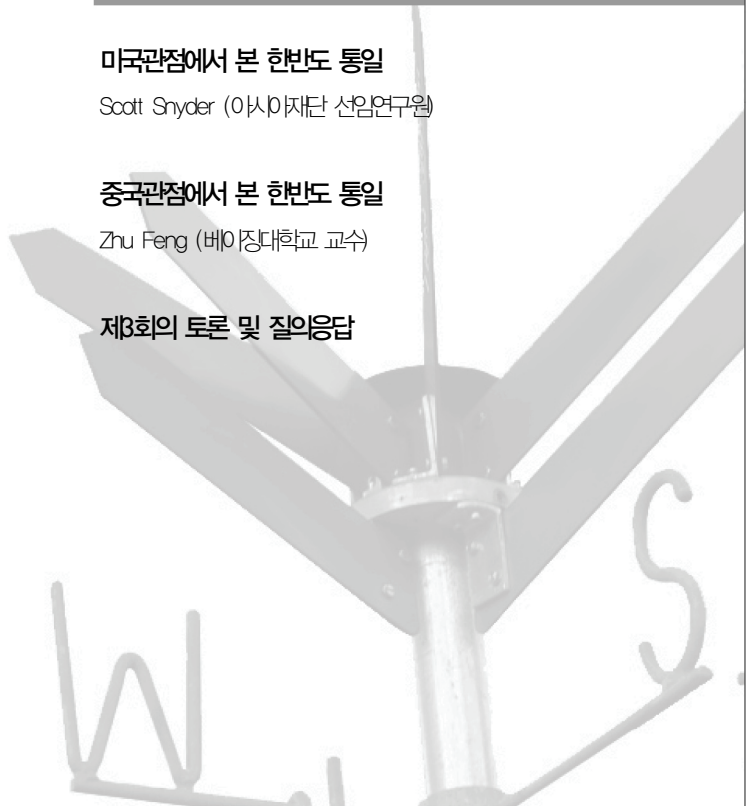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Scott Snyder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중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Zhu Feng (베이징대학교 교수)

제3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Scott Snyder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 Summary

한반도 분석가로서 한반도 안보상황, 동북아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미래에 관해 여러 번 발표한 적이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보통 시간이 남아 있고 당연히 나올 질문들은 다 나왔을 때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러면 청중 중에 누군가 (적어도 내게는)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한다. “언제 남북한이 통일될까요?” 내가 준비한 답은 다음과 같다. “저는 분석가이지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통일이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20년 전 통일이 되기 바로 몇 주 전에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을 보면 더 그렇게 느낀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이 또 있다. 즉, 남북 통일이 라는 사건과 통일의 과정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이는 남북 통일의 과정은 오래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은 남북한 대화에 대한 첫 노력의 결과를 기념하여 나온 1972년 남북공동성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냉전이 종결된 1992년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기본합의서로도 널리 알려짐)가 통일 과정의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과 남북 6.15 공동성명이야말로 그 과정을 촉진한 실제 촉매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통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정표이자 남북한의 상대적인 강점을 보여준 것이다.

통일이란 사건이 과정의 일부로 펼쳐질 때 그 과정의 성격과 잠재적인 성과, 그 과정과 관련된 승자와 패자를 보는 우리의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 관해, 결과는 남북한 화해의 상황 및 외부환경의 상황에 달려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마치 한반도의 통일은 변호 자물쇠와 같아서 내부 요인과 외부환경이 일치하여 정렬되어야만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회의에서 외부환경과 관련된 요인의 하나인 남북 통일에 관한 미국의 정책 및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미국의 접근방법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독일 통일의 경험을

(다른 연사들이 이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볼 것이다. 이것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한반도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논문은 2009년 6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배경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미국의 언급된 정책의 진화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지난 6월에 발표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독립적인 태스크포스팀 보고서에 파악된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비추어본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평가할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 통일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서의 중국 요인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

I. 독일의 통일: 한반도 통일에 관한 미국의 관점에 미치는 영향

통독 과정의 특성 중에서 미국 관점에서 본 통독의 매력은 평화로운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통독으로의 이행 과정이 긴장이나 갈등의 성격을 띤 과정의 사건으로 이어져 상당한 비용이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가 당국 간의 긴장이나 갈등의 고조로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뜻이다. 통독 과정의 성격이 평화로웠기 때문에 유럽 통합에서 독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는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었고, 소련과 미국-나토 관계가 신뢰를 구축하도록 도움을 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미국 정책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다른 측면은 아마 통독은 동서독 간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발전 및 정책의 결과였고 미국은 거의 관계나 책임이 없었다. 사실 미국은 통독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통일 방법에 관한 준비된 정책대응도 없었다. 그렇다고 한반도에서의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독의 상황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지원한 조지 부시 행정부 역량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지도력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헬무트 콜 총리의 지도력은 통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한 것이 통독의 길을 터준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요인은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을 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한국 대통령의 지도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통독 과정에서의 주된 역할과 개입은 통일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통일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문제들은 독일 지도자에

게 맡겼다. 이런 면에서 독일 상황과 한반도 주변 상황의 큰 차이는 독일은 제2차대전 후 관할권 문제에 외부 네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개입을 위한 명시적인 국제 체제를 포함한 기존의 체제가 만들어져 있었다. 6자회담 체제가 잠재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동북아의 지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방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이나 돌발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으나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많은 문제들은 미·중 양자협약에서 다루질 것 같다. 이러한 가능성에 비춰볼 때 한반도 통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긴밀한 한미동맹 관계의 조율이 매우 중요해지며 이것은 통독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II. 한미 공동비전 및 한반도 통일

한미 공동비전은 이 문제에 관한 이전 미 정부의 견해에 비해 한반도에 관한 미 정부의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인 문장이 들어있다. 공동비전에는 “우리 동맹을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고 평화로운 통일로 이어지도록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¹ 이것은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이고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긴밀한 동맹국으로 비교적 신뢰를 얻고 있고 동시에 미국 해외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 북한이 현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지 또는 현재 개혁 중인 북한정권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¹ The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June 16, 2009, <<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news/usa/2009/usa-090616-white-house01.htm>>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에 기꺼이 임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비전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관한 견해를 피력한 것은 아마 조지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당시 도라산역에서 한 연설일 것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나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한반도가 철사줄과 공포로 분단되는 대신 언젠가 상업 및 협력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남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이들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군대는 배를 채우면서 한반도 어린이들은 굶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자국민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주민은 국가란 기계의 톱니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² 이 연설은 대통령의 정책 의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부가 발표한 공동성명만큼 무게가 실리지 않으며 공식적이지 않다고 하겠다. 과거 미 행정부의 정부 정책은 항상 한반도 통일에 대해 비교적 조심스럽게 소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고 한국인의 의지에 달린 결정이라고 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교적 드문 언급 중에서 톰 케이시 부대변인이 말하기를, “궁극적으로 (통일) 같은 결정은 한국인 자신들이 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로서 현재 우리는 한반도를 비핵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³ 이 같은 언급은 비핵화 작업과 통일은 미국의 이익이 서로 다른 차원과 다른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표준적인 미 정부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며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인의 목표와 갈망을 지원합니다.”⁴ 또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길 바라고… 그 외 분야에서 한국의 평화 통일이 언젠가는 가능할 것입니

²- 2002년 2월 20일 부시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도라산역에서 연설

³- 2008년 6월 26일 국무성 브리핑에서 톰 케이시 부대변인

⁴- 1998년 9월 24일 미국의 북한 정책에 관한 청문회에서 한 커트 캠벨의 발언

다. 그러나 물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뤄져야겠지요.”⁵

과거 미 정부의 표현은 매우 약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통일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다고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포용을 원하든 봉쇄를 원하든) 오랫동안 가져온 의혹을 없앨 수 없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바람과 조건을 제시한 공동성명은 한미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바람은 같다는 확신을 한국인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인 문구가 북한과의 관계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중국이 한국 문제에 관해 한국 및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길 원하는지에 관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III. CFR 태스크포스팀의 우선순위 및 한반도 통일

미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독립적인 태스크포스팀은 한반도 정책의 6가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1) 수평적 확산 방지, 2) 수직적 확산 중단, 3) 비핵화, 4) 비상사태 계획, 5) 포용 촉진, 6) 북한 주민들의 처지 개선. 이러한 우선순위들은 이명박 행정부 및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조율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며, 이것은 우선순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태스크포스팀의 보고서는 자유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남북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이익을 위한 정책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동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기반이 한미 공동비전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철폐의 추진을 지지하나 비핵화 및 남북 통일 양자를 추구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수단이라 할 외

⁵- 1997년 7월 10일 국무성 브리핑에서 니콜라스 번스

부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의 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태스크포스팀은 대신 내부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비정부 차원의 포용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이 권고사항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두 정부가 태스크포스팀 보고서에 제시된 다른 우선순위도 완전히 이행하면서도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스크포스팀 내에서 북한이 협상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거의 보편화 되면서 비핵화와 남북 통일은 과거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동시에 그 과정을 평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 확률은 과거보다 작아졌다.

태스크포스팀의 특정한 우선순위 및 이들과 남북 통일의 관계에 관한 (이 주제는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핵 물질 또는 기술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남북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우발사태로 인해 처음엔 악화되겠지만 한국의 통제하에서 남북 통일이 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확산의 우려는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태스크포스팀은 남북 통일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반도 안정의 개선을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비상사태 계획의 조율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외부 세계와 훨씬 잘 통합될 것이며 북한의 인권상황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IV. 한·미·중 협력의 가능성 및 남북 통일

비핵화 및 남북 통일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미국 분석가들 사이에 미국과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중국의 입장, 영향, 이권의 평가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면에서 태스크포스팀 보고서

는 북한을 향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결속 추진 전략이 비핵화를 이루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고, 한반도의 최종 상태에 관해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남북 통일이 중국의 이권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조율하고 합의하여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재확인 변수들이 한국의 이권에 해가 되지 않게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사이가 크게 벌어졌고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다.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현 체제하에서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비핵화보다 안정을 더 우선시하고 한반도 이슈를 무리하게 미·중 관계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 이슈로 만들고 있다.

현재 미·중 관계의 어려움이 극복된다면, 양자가 한반도 협력에 있어서 서로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한 때, 북한에 대한 미·중 정책의 조율은 미·중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여겨졌으나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의견 차이가 대두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관리하는 데 경쟁할 것인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의 반응이 남중국해, 센카쿠 분쟁과 겹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보다 의견의 차이가 강조되고 경쟁의식이 강화되었다. 중국이 한반도를 중국 주변에 잠재적으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안보문제로 여기기보다 미·중 관계의 전략적인 이슈로 보는 경향이 있어, 미국, 중국, 한국이 북한 관련 긴장을 관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박자가 맞지 않는 상황이 악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세 당사자가 북한 내부의 불안이 증가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지만 우발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한 이웃국가들의 협력 부재로 이 지역에 이권을 가진 모든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중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Zhu Feng (베이징대학교 교수)

이 글은 초안원고로서 저자의 허락없이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의견이며,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는 북경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겸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 Summary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이 20년 가까이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쇠퇴는 명확히 드러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통일 가능성이 지난 60년 동안의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북한이 처한 주요 문제들은 화폐 개혁 실패, 경제난, 후계문제로 드러난 긴장, 그리고 선군정치 실패 등이다. 특히 2009년 11월 30일에 단행된 화폐 개혁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공격은 북한의 고립화와 직결됨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기본적인 변함이 없는 한 현재의 경제 정책과 대외 도발 같은 행동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북한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평양과의 갈등 해결이 동북아 경제 통합과 안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이 수십 년이나 해결 없이 계속 남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순간에 그 해결책이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고 있으며 북한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바로 통일이다.

I. 북한체제의 어려움은 통일의 가능성을 증대

북한이 현재 처한 대내외 상황의 수위가 이전과 수준이 다르다. 단순히 식량난이나 경제난이 아니라 ‘제2경제’ 또는 ‘암시장 경제’의 존재는 생활 필수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북한의 과도적인 제도 자체가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정권과 갈등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분명히 1990년대의 식량난과 식량배급제의 붕괴 때문에 생긴 문제로만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북한 정권이 대규모 국제지원 없이 북한의 체도를 개선하여 통치수준을 예전과 같이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럼에도 역설적인 것은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태도를 바꾸고 핵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와 우호적 관계를 얻으려는 정책을 선택하리라는 전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실패국가인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상국가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북한 정부가 생존을 위한 핵과 벼랑 끝 정책을 고수하는 한 외교적인 합의와 ‘그랜드 바겐’ 같은 극적타결의 전망은 없다. 분명한 것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는 요인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 요인은 북한 내 시장의 역할 증대, 계획 경제의 부담, 국민의 생계와 부족한 자원 사이의 마찰, 늘어가는 부패, 인민의 불만,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정보, 그리고 후계자문제 등의 여러 요인이 있다.

현재 북한의 최대 위기는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제재가 심해지는 가운데,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복원하지 않겠다는 남한의 의지는 북한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수익에 큰 손실을 일으켰다.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가 효과적으로 무기거래를 저지하는 등 외부 자금조달의 경로가 막힌 상태에서 중국만 압록강 대교와 라진 부두 개조 공사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계획은 자금조달의 경로가 될 수 없

다. 분명히 외부자금의 유입 차단은 북한정권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위협들 때문에 평양은 앞으로 1990년대처럼 정권을 그럭저럭 유지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위협들이 북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끊임없이 약화시키며 제도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II. 최선의 해법인 통일

당장 이 시점에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는 조짐이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 정부는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하에 북한주민들을 능률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 정책구조는 여전히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 시점에 북한의 통치 구조가 치명적으로 약해진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또한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카드로 남한 및 국제사회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벼랑 끝 정책은 정권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들은 북한의 붕괴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고 싶어하므로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 세력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북한이 수개월 안에 무너질 수도 있으며 누구나 이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김정일의 건강 상황, 높은 인플레이션, 후계자 문제, 외부자금 유입의 차단 등은 정권의 붕괴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 정부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 의미 있는 정책변화를 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있는 동안 북한이 잘못된 대내외 정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이 북한 국내의 상태를 동결시킨 것이다.

당분간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적더라도, 우리는 협력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변국이 담당해야 할 위험 부담이 너

무 크다. 붕괴를 상상할 때, 중요한 질문이 두 개 있다. 첫째는 북한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의 문제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금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지속적으로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와 같은 제재를 진행하면서 정권붕괴를 기대하면 북한 주민의 어려움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고 비핵화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 지원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개입하지 말고 붕괴를 기다릴지, 아니면 북한과 협상하고 지원 대신에 비핵화를 요구할 것인지 국제사회가 선택해야 한다.

III.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의 통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타협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는 영원히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선택하면 북한 경제를 침체시키면서 핵 개발 능력도 진압하는 효과는 있으나, 동시에 ‘연착륙 시나리오’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붕괴 형식에 상관없이 극심한 북한 내 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차후 국제사회가 국가 건설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내야 된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와 6자회담이 비상사태를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개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안보리와 6자회담의 허가 없는 일국의 단독 개입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 이후에 ‘국가 건설’의 목적은 남북한의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자유 의지로의 통일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자주권 있는 유엔 가입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북한이 민주주의적이고 결속력 있는 안정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통일을 위한 인위적인 개입은 안될 것이며 남북한이 서로 인정해야 통일이 가능하다. 국제사회

는 남북 통일보다는 북한 붕괴에 따른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컨대 대량살상무기의 안정성, 인도적인 사태, 난민 탈출, 내란과 내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안전하게 장악하거나, 인도적인 지원을 하거나, 국경 횡단을 제어하거나, 북한 군의 무력을 해제하거나, 북한 내부 통치권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통일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해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문제해결이 통일을 위한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런 사소한 차이로 바람직한 통일과정이 결정될 것이다 먼저 통일한 다음 북한의 국가 건설을 진행할지, 아니면 통일 이전에 먼저 국가 건설을 진행할지의 선택의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이 어떤 형식으로 붕괴하든지 그 과정에 남한이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은 남북 통일은 남한이 어느 정도 부담을 짊어질 의지가 있느냐, 또는 통일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 남한이 어느 정도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튼 통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통일 계획은 아직 불확실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면 통일 과정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남한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IV. 남북 통일과 주변 국가의 협력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회피하고 싶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한반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미국, 중국, 한국 세 국가가 통일 과정에 서로 협력하도록 합의하는 한 붕괴로 인한 통일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 중에 중국이 미국 주도하의 남북 통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

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회의론자들 중에는 중국이 한국 주도하의 통일조차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이들은 동북아의 문화, 역사, 정치 및 상황 요인 때문에 한반도에 독일같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동독과 달리, 북한이 경제협력과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 갈수록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6자회담이 교착 상태이고 유엔 제재가 진행된 현시점에는 이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⁶ 또한 최근에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이 증가되어 왔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8월 26-30일 중국 동북지역인 지린성을 방문한 것을 살펴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대북 지원 목적은 북한 붕괴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은 국익을 위한 것이지 김정일 일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의 주요 현안은 주변지역의 전략적인 군 환경, 국경 안보, 경제 개발, 국경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성 등 다양하다. 다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대한, 대미, 대일 관계와 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탈냉전 이후 중국이 북한의 지원 요구를 무조건 응하지 않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냉전 시대와 같은 바터식 물자지원과 군 원조이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자립경제 국가가 아니었다. 2010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두 번이나 방중한 것은 북한은 절대적으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외부지원이 없으면 북한정권의 통제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김정일은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지원을 방해하는 요인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아니라 중국이 냉전 시대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냉전 구도로 들어가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에 냉전 시대와 같

⁶ Suk Hi Kim, "Will North Korea be Able to Overcome Its Third Wave of Collapse?"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10-041, July 27, 2010), <<http://www.nautilus.org/publications/essays/napsnet/policy-forums-online/security2009-2010/will-north-korea-be-able-to-overcome-the-third-wave-of-its-collapse>>.

은 대량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자기결정과 자부심으로 상징되는 주체사상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을 달성하도록 하는 교조적 경제정책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경제적 측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이러한 주체사상의 원칙을 따르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 붕괴를 유도하려는 국제적인 시도는 중국의 반발에 처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은 국내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⁷ 다만 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개입을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 적어도 다국적인 협력개입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 사태에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 붕괴 시나리오가 단지 공상만은 아니다.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정책 때문에 북한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핵개발을 계속하고 대외 핵무역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이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협력과 안보협약을 제의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런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입장을 가진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도 북한이 또 다시 6자회담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국제회담에서 북한이 자꾸 번덕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봉쇄정책은 중국의 비핵화 입장과 공존하게 될 것이다.

지난 9월 28일에 열린 북한의 당대표자대회에서는 획기적인 인사 개편이 단행되었다. 김정일의 여동생, 아들, 그리고 친구들이 대거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하였다. 지금까지 무명이었던 김정은의 격상, 그리고 다른 김정일 일가의 구성원에게 섭정과 같은 역할을 맡긴다는 사실은 북한 국내정치 상황의 비밀을 심화시킨다. 신세대 지도자들이 안정적

⁷- Bruce Klingner, "Leadership Change in North Korea: What It Means for the U.S.,"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7, 2010, <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0/04/Leadership-Change-in-North-Korea-What-it-Means-for-the-US>.

인 정권을 세우고 대외 관계를 개선하며 경제개발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는 전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⁸

북한의 현재 국내 상황이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을 바꿀 만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국경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신세대 지도자가 경제 개발에 힘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젊은 관료들에 주목하고 북한 관료들에게 국제사회에 참여를 장려한다면 말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붕괴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핵화 협상은 북한 붕괴를 시도하는 전략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제도 안으로 포용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상황을 충분히 알게 된다면 남북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의 제도는 영향력이 약해지고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 통일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V. 결 론

결론적으로 남북 통일이 비상사태 반응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경제적, 사회적인 통합을 통하여 법률적, 군사적인 정치 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 전체가 국제적인 협력하에서 전개될 것이다. 국제적인 개입으로 인해 북한인민들의 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한반도에 민주주의적인 평화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단독적 군사 개입이나 정치적 합병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는 한 남북 통일을 환영할 것이다. 통일과정에 일어날 내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⁸- Martin Fackler and Mark McDonald, "North Koreans Bolster Power of Ruler's Kin,"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8, 2010).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통일 협상 과정에서 남북 갈등이 발생할 때 중국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유익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남한 정부는 먼저 통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게 그런 의지가 있다면 통일에 대한 부담의 대부분을 다국적 형태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3회의 토론 및 질의 응답



이 상 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스캇 스나이더 대표와 주평 교수의 발표는 각각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발표자 모두 한반도 통일과정의 중요성 및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이 겉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북한 붕괴 시 북한지역을 한국이나 미국이 먼저 접수하는 것을 우려하며,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먼저 북한지역을 접수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다. 한·미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핵 비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스나이더 대표의 발표문에 “미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독립적인 태스크포스팀은 한반도 정책의 6가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고 하였다. 비핵화, 핵 확산 방지 등으로 매우 현안 중심적인 접근인데, 만일 한반도 통일이 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한·미간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스나이더 대표께 질문을 하고 싶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갖고 있는 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관련하여 여전히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핵물질 관리인가 아니면 남북한 간의 통일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어떤 청사진이 있는 것인가?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한반도

통일보다는 북한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북한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주변국들이 북한에 개입하는 대신 북한이 스스로 사태를 수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이 고수하는 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닌 현상유지정책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과정은 장애물이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숙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기본방향은 남북한 정권이 아닌 남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현재보다는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은 현 상황보다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의 주체는 결국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 주체로 통일되는 것 역시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독재체제로, 혹은 시장경제체제에서 폐쇄경제체제로 통일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은 결국 두 가지일 것이다. 우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지금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북한의 붕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3대 세습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한반도 운명결정에 있어서 중국의 변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은 과거 도광양희라는 매우 겸손한 외교를 펼쳤다면 오늘날은 패권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숨기지 않는다. 또 다른 장애요인은 북한 3대 세습체제의 장래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 막 권력이양을 시작했는데, 20대 청년 김정은이 당, 정, 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장악할지 여부가 북한체제 안정에 결정적 변수가 된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위협관리 차원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우리에게 통일의 역량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3대공동체 통일방안 -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이 제시되었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세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이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충분히 있고, 구체적으로 통일과정을 준비할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을 삼가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즉, 한반도의 현 상황을 본다면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방해하지 말고 한국의 노력을 지지해주고 이해해달라고 주변국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김 용 호 (인하대학교 교수)

통일 문제에 대한 외국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의 시각이 좀 달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떻게든 통일을 해야 하는 입장 이기에 한반도 통일이 미국과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을 해야 한다. 즉,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설득의 효율성을 개발해야 한다.

김 흥 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자국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한국, 미국, 중국은 각자 나름대로 준비는 하지만 3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스나이더 대표와 주평 교수의 한, 중, 미 3국의 협력 강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두 분의 발표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에는 4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비핵화에 대한 의지이다. 셋째, 북한

정권의 인위적 교체는 곤란하다. 넷째, 통일은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한다. 하지만 양국 간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중국은 북한정권의 유지에 중점을 둔다. 최근 천안함 사태, 센카쿠열도,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해석을 놓고 미·중 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측면이 보인다.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미·중 간의 협력은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향후 미·중 간의 협력 전망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개념적 의미로 봤을 때 상호 대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두 관계를 상호 갈등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 중, 미 3국 간에 공동의 이해와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협력은 매우 어렵게 된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에 대비해서 주변국들은 협력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평 교수의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나 중국 주류의 사고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주평 교수께서는 본인과 중국의 핵심 정책결정자들과의 괴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내부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협력적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북한은 앞으로 핵개발 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북한은 핵을 통해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불안정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주평 교수의 논리로 본다면 중국 대북 지원의 목표는 북한의 붕괴 방지이며 북한지역에 외부세력의 인위적 개입 차단이다. 중국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과 북한 정권의 생존 보장 정책은 우리에게 매우 보수적으로 비춰진다. 중국은 어떠한 조건하

에서 현 중국의 보수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고자 할지 궁금하다. 만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 관용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김국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학술회의가 경쟁적인 게임은 아닐지라도 미국학자와 중국학자가 서울에서 통일 문제를 논의 할 때 조금은 다른 입장일 것이다. 미국학자는 보다 편안한 입장에서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학자는 다소 불편한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논의할 것 같다. 통일연구원은 독일의 통일에 관해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독일의 사례를 추적하면서 콜 수상의 뛰어난 리더십에 감탄을 하였고, 미국의 독일 통일 지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미국이 했던 중요한 역할을 한반도에서도 동일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이 어찌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단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안보정책 및 통일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합의된 공동비전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과 핵문제를 논의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남북한 상호 간에 평화적 협상을 통해 통일을 하고자 할 때 중국이 방해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을 중국과 공유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미국은 통일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의 일환으로 논의할 수 있다. 비상 계획과 통일문제가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을 설명해주시기를 바란다.

주평 교수의 발표문에는 민주주의(democracy)가 2번 등장하며 한반도 통일은 민주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

는 민주주의 개념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주평 교수의 의견은 어떠한가?

■ 김 용 호 (인하대학교 교수)

청중의 질문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1) 통일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 대안으로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논의가 필요한가? 2) 109쪽에서 주평 교수가 “북한이 수개월 안에 무너질 수도 있으며(North Korea’s collapse might be a couple of months away)”라고 언급했는데 지난 주 조선일보에서는 북한 경제의 70%가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자 간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즉, 위 질문을 쉽게 설명한다면 북한이 수개월 내에 붕괴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으나 중국의 대북 경제적 지원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붕괴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3) 한중 수교 시,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에 따라서 한국은 대만과 단교를 했다. 중국도 한국이 대만과 단교했던 것처럼 북한과 단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4) 북한의 급변사태를 한국이 통일로 이어가는 것을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5)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인위적인 붕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북한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는가? 6)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중관계도 발전하고 아시아의 평화적 번영에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과연 우리의 통일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방관할 것인가?

질의응답

Scott Snyder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에게 있어서 한반도 통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는 여기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가 어렵다. 관건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 대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상호 배제적이지 않고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상층 지도부에서는 사실 통일 한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통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 한국이 아시아의 스위스나 핀란드와 같은 중립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주변국에게 행사할 영향력이 별로 없고 국가의 위기상황이 닥칠 때 결정적으로 제시할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Zhu Feng (베이징대학교 교수)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지난 50년 간 우호적이고 지지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6월 중국의 칭화대학교를 방문하여 연설을 했는데, 나는 당시 청중에 앉아서 그 연설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통일은 꿈이다. 한국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이라는 꿈을 이뤄야한다”고 하였다. 지난 20년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도움은 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역할을 무

시할 수 없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북한은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점차 번영하고 있다. 선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북한과는 국교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평양과 베이징의 관계가 돈독하며 북·중 지도부 간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양국 국민은 그리 친밀하지가 않다. 중국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비난받는다. 나와 비슷한 세대의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패닉상태라고 말한다.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대북 경제적 지원과 교역을 완전히 중단하면 과연 한국인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좌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한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측컨대 만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단행 할 경우 중국은 대북정책을 실제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 김 용 호 (인하대학교 교수)

20년 전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한반도에도 곧 통일이 온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동안 통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윤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 (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중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중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국제사회의 북한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술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 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의 **독일 통일 20년 평가**

독일 통일의 과정
Jörg Bentmann (독일연방내무부 신연방정부 담당국장)

독일 통일의 법적 근거와 통일의 의미
Siegfried Broß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제1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제2회의 **한반도 통일비전**

독일 통일의 성과
Ralph Michael Wrobel (독일 츠비카우시 베스트작센대학교 교수)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제3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관점**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Scott Snyder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중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Zhu Feng (베이징대학교 교수)

제3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